

제2520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새 주말대사에 강창일...꼬인 한일관계 풀까 5



은행聯 새 사령탑 김광수...‘관피아 논란’ 불씨 9

코스피(23일) ▲ 2602.59 (+49.09P)
코스닥 ▲ 873.29 (+3.11P)
환율(달러당 원화) ▼ 1110.40 (-3.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 0.955% (-0.008%p)

공공임대가 쏘아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

LH, 공공임대 15곳 재정비 추진 중계1·가양7단지 시범지로 선정 ‘영구임대’ 일산 흰돌4단지 기대 국토부, 내년초 재건축 일정 확정

내년 입주 30년 차를 맞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지가 나왔다. 일산신도시 백석동 흰돌마을 주공 4단지 아파트다. 다른 1기 신도시 아파트에도 재건축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노후 공공임대 종합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15곳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낡은 임대아파트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분양 가구와 임대 가구를 섞은 소셜믹스 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준공 20~30년차 공공임대 아파트 158곳 중 사업성과 노후도 등을 평가해 재건축 후보지를 선정했다. 새 아파트는 용도지역 중(種)상향 등을 통해 고밀도로 높여 짓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내년부터 이주 절차에 들어갈 시범사업지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 1단지와 강서구 가양동 가양 7단지가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지 중 눈에 띄는 곳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 4단지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가 조성될 때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어졌다. 총 1141가구로 10~15층 9개 동이 들어섰다.

현재로서 흰돌마을 4단지가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공식화되는 첫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1기 신도시에선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사업을 확정하면 공공임대아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인 수도권 1기 신도시 주요 단지 (단위: 가구)

위치 및 단지명	준공연도	가구수	용적률
군포 산본신도시 우록주공 7단지	1994년	1312	226%
고양 일산신도시 장성마을 2단지	1995년	591	161%
성남시 분당신도시 한솔주공 5단지	1994년	1158	170%
성남시 분당신도시 나리주공 4단지	1994년	1006	180%
성남시 분당신도시 나리주공 3단지	1994년	770	178%

※출처: 부동산114 각 단지

파트 재건축 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소유주 여러 명의 이해가 얽힌 민간 재건축 사업과 달리 공공임대아파트는 소유주가 LH뿐이어서 권리 관계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주변 민간 아파트보다 용적률도 낮아 고밀 개발 여지도 충분하다.

흰돌마을 4단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선 재건축 후향 효과도 기대한다. 국토부 계획대로 토지용도 지역을 중상향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지구단위계획이 지금껏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장애물이 됐기 때문이다. 흰돌마을 4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나머지 단지에서도 재건축 사업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간이다. 민간 재건축에 비해 사업 진행이 빠르겠지만 재건축 추진 확정부터 입주까지 짧아야 7~8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정비업계 설명이다. 일러야 2030년대 재건축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시범사업지를 제외한 후보지 13곳의 재건축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 외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입차인 의견 등을 받아 재건축 추진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코스피 역대 최고치 경신 ‘새역사’ 코스피가 23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26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09포인트(1.92%) 오른 2602.59에 거래를 마쳤다.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2598.19를 2년 10개월 만에 넘어섰다. 코스닥은 3.11포인트(0.36%) 오른 873.2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3.9원 내린 1110.4원을 기록했다. 서울 증주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관련기사 16면 연합뉴스

갑작스런 어린이집 휴원 통보... ‘보육대란’ 우려

서울시, 5380곳 모두 휴원 결정 맞벌이 가정 등엔 긴급 무상 보육 연말까지 ‘천만 시민 멈춤’ 선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는 24일부터 관내 전체 어린이집의 휴원을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전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시행을 통보해 ‘보육대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서울시는 “최근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 전체 어린이집 5380개소를 별도 해제 시까지 휴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정 돌봄이 곤란한 아동을 위해 무상 긴급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들은 연말연시 각종 행사나 모임이 줄줄이 취소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감축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할 예정이다.

서울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 공표가 있을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시행한다.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 시설을 집중 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만 아니라 스타디움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규 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 종교시설에 이보다 강화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알림

자본시장 선도한 ‘마켓리더’ 대상

올해 10회째...내달 10일 오후 3시 eT라운지서 시상식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올해 자본시장을 선도한 마켓리더를 선정합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발전을 목표로 시작한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열리는 시상식은 올해 시장을 이끈 마켓리더들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선진 금융회사로의 발돋움을 준비하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IB부문 △리서치부문 △혁신금융부문 △DCM부문 △자산관리부문 △연공펀드부문 △MTS부문 △ESG투자부문 △사회공헌부문 △해외액티브펀드부문 △종합대상 등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장 소 : 이투데이미디어 사옥 1층 eT라운지
- 주 최 : 이투데이미디어
- 후 원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 문 의 : 이투데이미디어 사업부 (02) 799-6728

강남 전셋값 ‘20억 시대’

‘이리팍’ 전용 84㎡ 두달새 4억 경중 지난달 36.6억에 팔려...전세가율 57%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사진>’ 전용면적 84㎡형이 20억 원에 전세 거래됐다. 서울 강남에서 전세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17면

23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B타입은 15일 20억 원(3층)에 전세 계약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직전 전세가 격(9월)은 15억7500만 원(9층)이었다. 두 달 새 전셋값이 4억 원 이상 급등한 셈이다. 아파트 전용 84㎡형 전세가격이 20



억 원을 넘어선 것은 아크로리버파크가 처음이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지난달 36억6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호가는 34억5000만~35억 원으로 전세가율은 57% 수준이다.

이 아파트뿐 아니라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 1·2단지’ 등이 지난달 19억 원(전용 84㎡ 기준)에 전세 거래됐다. 비강남권

인 성동구 성수동 1가 ‘트리마제’도 최근 18억5000만 원에 새 세입자를 맞았다.

서울 전셋값 급등은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보호법 영향이 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임차인이 늘면서 전세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53% 오르며 전주(0.46%)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2일에는 0.7% 올라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 역시 지난달 기준 191.8로, 2015년 10월 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문선영 기자 moon@

예약 줄줄이 취소... “올해 간판 안 내리면 다행”

르포 거리두기 2단계 앞둔 수도권 골목상권

“올해는 끝났죠. 간판 안 내리면 다행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중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성훈(43·가명) 씨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한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져 숨통이 트였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가 증가하자 예약 취소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50명대를 유지한 확진자 수는 12일을 기점으로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18일에는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2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5월 이태원 클럽, 8월 광화문 집회와 달리 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졌고, 겨울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생겼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인 카페도 규제... 매출 직격탄 자영업자 “위기 대응 연금 필요 손익분기점 따라 지원 달리해야”

다시 거리두기가 상향되자 자영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지만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 등 영업이 어려워진다.

〈개인 카페도 규제 = 식당만큼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카페다. 이전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만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지만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개인 커피전문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강서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최재일(38·가명) 씨는 “이번에는 소규모 카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에는 디저트 수요도 많은데 판매량이 줄어들 거 같아 걱정”이라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식당 모습.

고 털어냈다.

PC방 업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보통 연말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말고사 등 중요한 시험들이 끝나 PC방을 찾는 10~20대가 많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거리두기 상향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PC방 업주인 김우진(42·가명) 씨는 “칸막이가 다 설치돼 있고, 주로 손님 혼자

게임을 즐기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영업 방식에 차이가 생기진 않는다”면서도 “(거리두기 상향으로) 외부 활동 자체가 줄어들어 PC방을 찾는 사람도 적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PC방은 전에 영업정지가 된 적이 있어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매칭 ‘연금식 지원’” =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는 지

속가능한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일시적인 지원금으로는 도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박창수(31·가명) 씨는 “사업장마다 월세나 운영 인력이 다른데 지원금은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급된다”며 “손익분기점 등 기준을 새로 만들어 지원금 액수를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성격이나 구조에 따라 지원액수나 방법 등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PC방 업주인 김 씨는 ‘연금식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연금식으로 돈을 적립하면 서울시나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 주면 좋겠다”며 “사업주는 미리 위기를 대비하고 시나 정부는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6680억원을 투입했다”며 “위기 업종은 553억 원을 특별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현금 지원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홍인석 기자 mystic@

최고의 연봉과 복지를 내세운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재 유치 전략이 이전 먹혀들지 않고 있다. ‘실리콘밸리 드림’을 꿈꾸며 몰려들었던 고급 인재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작은 스타트업으로 떠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뜻밖의 성찰이 몰고 온 변화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지방 변두리의 스타트업들은 최근 뜻밖의 인재 풍년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재도 보통 인재가 아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실리콘밸리의 내로라하는 기업 출신들이 몰려들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치열한 삶에 닳고 닳은 이들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스타트업으로 탈출을 꿈꾸면서다.

돈보다 삶의 질... 실리콘밸리 ‘인재 엑시트’

코로나 사태로 가치관 변화... 폐북·트위터 출신들 美변두리 스타트업에 몰려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스타트업 블루밍턴은 WSJ에 “창업 7년 만에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언감생심, 5개월 사이에 10명이 넘는 페이스북, 트위터 출신 인재들이 이력서를 들이밀었다. 디핀더 상 블루밍턴 창업자는 “구글, 테슬라로의 인재 유출은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는 고급 인재 블랙홀이었다. 사람들은 등골이 훅 정도의 집값과 교통지옥을 감수하면서도 실리콘밸리로 몰렸다.

혁신의 심장부가 보장하는 경험과 영감을 누리기 위해서였다.

견고했던 성을 허문 건 코로나19였다. 재택근무가 길어지자 사람들이 삶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돈과 자부심으로 살 수 없는 삶에 눈뜨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리프트,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에서 일하던 인재들이 작은 스타트업으로 기꺼이 터전을 옮겼다.

비영리기구 원아메리카웍스가 5월 이후

각지에서 개최한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3800명 이상의 구직자 가운데 실리콘밸리와 뉴욕 출신이 각각 25%, 9%였다.

MS 산하 깃허브 부대표를 지낸 필립 루드케는 유타주에 있는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해 “삶의 근거지에 대한 고민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가이 버거 링크트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소비자가 찾는 상품과 서비스에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면서 스타트

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됐다”며 “추진력을 얻은 스타트업들이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인재 이동의 파급력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 인재를 영입한 스타트업들은 자금을 유치하기 쉽다고 입을 모은다. 구글 등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친환경 실내 농장 스타트업 앵하베스트로 옮긴 마르셀라 버틀러는 WSJ에 “실리콘밸리가 지닌 결핍의 문화를 떠올리면서 이직을 굳혔다”며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이지만 충분한 시간도 공평도 없는 곳이었다”고 했다. 연봉이 10만 달러(약 1억 원) 이상 줄었다는 그는 “수입은 줄었지만 구매력과 삶의 질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0jung2@



©Hayon Studio

현대프리미엄아울렛

SPACE 1

쇼핑에 아트와 체험을 더한
국내 최초 신개념 갤러리형 아울렛 SPACE1을 남양주에서 만나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50

세계적 아티스트 하이메 아온이 설계한 조각공원, 아웃도어 가든에서 펼쳐지는 액티비티, 문화와 예술로 채워지는 프리미엄 쇼핑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h point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아울렛 현대백화점면세점 한성 현대리마트 현대HCN 현대렌탈케어 현대그린푸드 현대드림투어 현대Hmall 더현대닷컴 더현대닷컴 H패션올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지구단위계획' 손덜까... "민간 아파트 재건축 쉽지 않아"

리뉴얼 물꼬 튼 '흰돌 4단지'

기존 용적률·건폐율 완화 여부 촉각 소셜믹스 주거환경 개선효과 기대 일산 넘어 분당서도 재건축 움직임 국토부 "공공임대 취지 아냐"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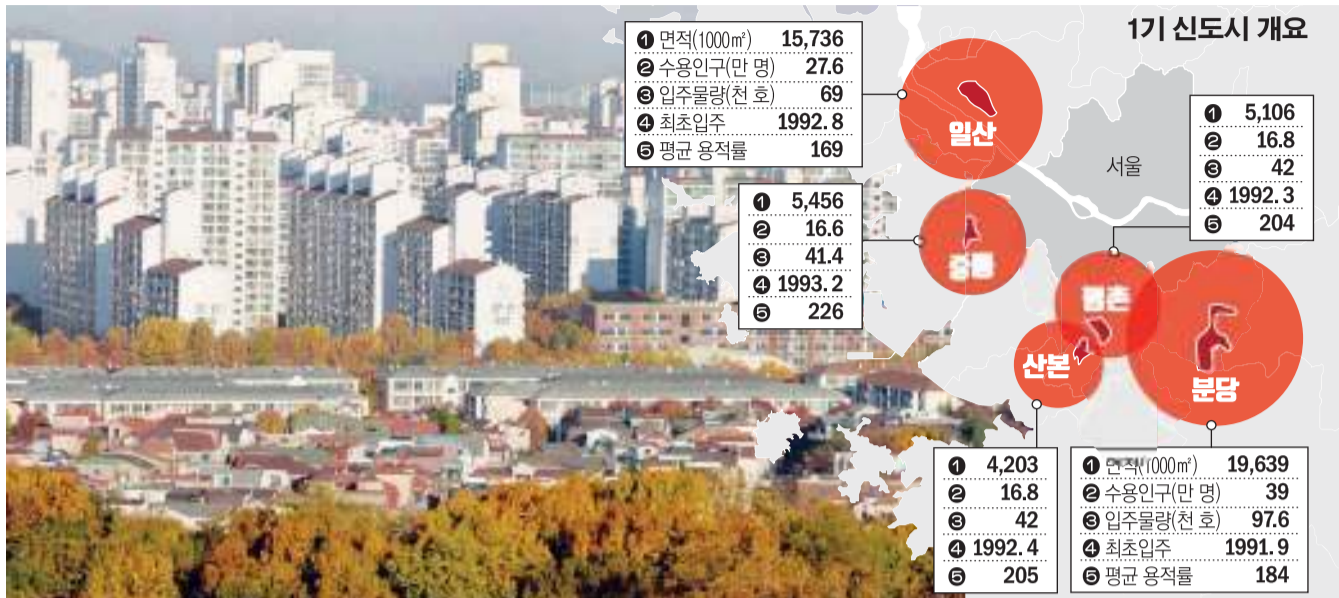
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 다만 느린 사업 속도, 이주 대책 등은 넘어야 할 벽이다.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마을 주공4단지가 재정비될 경우 일산신도시는 물론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첫 재건축 단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입주 30년 차를 넘어서는 내년이 되면 1기 신도시 곳곳에선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아파트보다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민간 아파트는 안전진단, 주민 동의율 확보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산신도시 흰돌마을 4단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흰돌마을 4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 일산신도시, 나아가 1기 신도시 전체에서도 재건축 개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구단위계획에 발 묶였던 신도시= 시장이 주목하는 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선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가 국토계획법보다 엄격하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대개 지구단위계획에 정해진 상한에 걸쳐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흰돌마을 4단지가 재건축된다면 일산신도시 일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



가피하다. 국토부 계획대로 고밀 재건축을 한다면 아파트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위한 명분이 생긴다.

◇주변 단지, 가격 따라잡기 기대= 주변 단지에선 흰돌마을 4단지 재건축에 따른 후광 효과도 기대한다. 과거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주변 단지까지 저평가받았지만 흰돌 4단지가 소셜믹스(한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가 함께 들어서는 것) 새아파트로 거듭나면 이 같은 단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임대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백석동 G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흰돌마을 4단지가 재건축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을 마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인프라가 확충되고 집값도 신축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 않겠냐"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흰돌마을 4단지 인근 국제한진3단지외 서안5단지에선 연계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사업 속도를 높이고 종상향 혜택도 함께 누리겠다는 구상이다.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에 민간 아파트와 연계 재건축을 제안했다. 국토부 측은

"민원은 받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 정비라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아직 제대로 검토가 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일러야 2028년 입주"= 임대아파트 재건축에서 가장 큰 난관은 속도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재건축에 준비 기간만 3~4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를

매년 1~2곳씩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데 통상 2~3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러야 2028년 입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이주 수요도 관건이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기존 입주자들은 준공 때까지 거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표류할 우려가 있다. 흰돌마을 4단지는 규모가 1141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여서 이주 수요가 적지 않다.

다만 2020년대 중후반이 되면 3기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측은 "인근 공공임대아파트 공가(空家·빈집)를 활용하거나 장기 미매각 학교 용지를 이용하는 등 촘촘한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진형대안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 규제나 시장 상황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고민 깊어진 '리모델링 추진 단지'

"더 기다리다 '고밀개발' 신축할까" "일반 아파트는 사업성 담보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잠들어 있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육망을 깨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에선 용적률 상향이 담보되는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준공 30년을 앞둔 노후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선 일부 단지들이 산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당에선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과 느티공원3·4단지, 일산에선 대화동 장성마을 2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산본신도시에선 우록주공7단지가 9월 리모델링 조합 창립총회를 마쳤다. 세종주공6단지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위 발족 절차를 밟고 있다.

1기 신도시 단지들이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사업에 나서고 있는 건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서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180% 수준을 재건축 사업성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1기 신도시들의 평균 용적률은 대부분 200%를 넘어서다. 일산은 평균 169%로 그나마 낮은 편이나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은 225%에 달한다.

정부가 19일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노후 임대아파트 종합정비계획에는 앞으로 임

대아파트 15곳을 철거 후 신축하는 재정비 방안이 담겨 있다. 여기엔 '용도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로 신축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시장에선 임대아파트 재정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본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가 임대아파트 용도 상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서면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나 일반 단지들 모두 재건축 사업쪽에 군침을 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임대아파트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반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커져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론도 여전하다.

산본신도시 우록주공7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임대아파트와 달리 사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적률을 높인다면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추진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비중 확대 등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연과 사람을 잇는다

하늘의 빛은 끌어안고, 바람의 힘은 받아들여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로 새로워집니다.
자연이 힘이 되는 세상, **한국중부발전**

KOMIPO
한국중부발전

론스타 먹튀 뒤에 모피아... 금융당국은 여전히 침묵

정부와 국제소송 8년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ISD)을 제기했다. 소송에 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영화 '블랙머니'의 끝 자막)

지난해 11월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 '블랙머니'는 2003~2011년 미국계 투자자 본인 론스타(극중 스타펀드)의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둘러싼 검찰·금융당국·금융권의 막후를 다루고 있다. 영화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자산 가치" 70조 원의 대한은행을 1조7000억 원에 매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헐값 매각'이라는 것이다. 당시 외환은행의 부채를 감안한 실제 순자산 규모는 수조 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011년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는 9년 새 최소 4조 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튀(먹고 튀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중국 상장사인 차이나그레이트·고섬 등도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2000년대 초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에 나서자 일부 외국계 자본이 유망 사업장을 선점하면서다. 이에 시장에선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론스타 혼자 가능했을까? = 외환은행이 팔린 이유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매각을



2015년 5월 15일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에 5조 원대의 소송전이 벌어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양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검찰, 14년 만에 재수사 착수 금융위 "이상한 지점" 인정에도 로비로 관련자 국감 출석 무산 일각선 감독당국 이해관계 지적

통해 신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화 '블랙머니'는 '모피아(옛 재무부의 약칭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세력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동원해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조작한 것으로 설정했다. 극중 불륜관계인 금감원·외환은행 직원이 짜고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조작하는 식이다. 그 결과 외환은행 매각의 정당성이 부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BIS 비율은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산출된 추산치고, 실제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악화하고 있어 매각이 시급했던 상

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부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20 국정감사'에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뀌기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다수 정치권 인사들과 금융당국은 침묵했다. 금융위원회 로비 덕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론스타 사태 관련 인물 5명 모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볼 수 없었다. 전지에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론스타 사태 관련해 마이클 톰슨·스티븐 라엘리스 쇼트 등의 범죄인도청구를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의 조력을 통한 또 다른 론스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 규제를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론스타 사건) 당시 로비했던 사람들이나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있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매각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의 ISD를 제기했다. 8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론스타는 최근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7000만 달러(약 9700억 원)를 제시했다.

검찰은 9월 '먹튀 논란'을 불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06년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14년 만에 다시 수사에 나섰다. 당시 불법 매각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전직 고위관료들을 조사할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IFC 등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날까" = 외국계 자본 밀어주기 의혹은 론스타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는 AIG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건립 계약을 맺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고, 서울시가 AIG 측에 99년간 사업부지를 빌려주고 이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99년 후에는 건물이 노후돼 사실상 가치가 툭 떨어져 특혜였던 셈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계약은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만에 하나 입찰했을 경우 서울시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었다. AIG는 운영 개시 5년 만인 2016년 IFC 빌딩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2조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자본의 먹튀도 있다. 중국에서 신발과 의류를 생산하는 차이나그레이트는 2009년 중국이 아닌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사업은 중국에서 하고, 자본은 한국에서 조달하는 역외지주회사 형태였다. 상장폐지로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액만 최소 418억 원으로 추산됐다. 중국 섬 유업체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으나 2개월 만에 1000억 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013년 상장 폐지됐다. 금융감독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과도한 실적 쌓기가 낳은 참사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면 되는 현재 규정을 별도재무제표도 함께 공시토록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진짜 문제는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권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인터뷰

윤영대(사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계 기업 먹튀가 매년 반복된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닌 '법을 무력화하는 내부 권력자' 때문"이라며 "내부 질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 분쟁' 사건은 8년째 진행 중이다. 극동건설,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차익을 챙긴 론스타는 한국을 떠난 뒤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인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방해 때문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고,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먹튀 사태 관련해 16년째 추적하고 있다. 윤 대표의 칼날은 사실 외국계 투기자본보다 '먹튀'를 방조한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더 날카롭게 서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은 당연한데, 여전히 금융당국이 외국계 기업 먹튀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윤 대표는 "외국계 기업의 성공 신화 뒤에는 '힘 있는 전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외국계 기업이 1997년 IMF 외환위기 고통을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던 이유 역시 한국 경제가 취약하고 부패가 심해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 관료들이 외국 자본의 앞잡이가 되면서 국



“고위 관료들이 앞잡이 돼 외국자본에 헐값 매각 반복 론스타도 당시 정권과 결탁”

가 자산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행위가 반복된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표는 론스타 먹잇감 사건에 극동건설 인수도 함께 떠올렸다. 웅진이 인수했던 극동건설은 한때 국내 업계 4위까지 올랐던 건설회사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700억 원에 인수했다. 론스타는 그 후 사옥 등 핵심 자산을 팔아치우고,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을 배당으로 빼가는 등 무차별적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론스타는 2007년 건설업 진출을 노리던 웅진에 극동건설을 매각한다. 웅진 인수가격은 6600억 원. 당시 업계에선 4000억 원 안팎을 예상했다. 웅진의 공격적 배팅 뒤에는 하나은행의 전폭적인 대출 지원이 있었다. 덕분에 론스타는

막대한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결국, 극동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했던 웅진그룹은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의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매매 계약 체결에도 성공한다. 론스타는 9년 동안 한국에서 4조 6000억 원을 벌고 2012년 탈출했다.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다.

윤 대표는 "국세청이 추진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내부 권력자들의 공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부과는 법으로 규정된 것인데도 외국계 기업에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결국 한국이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표가 지적한 진짜 문제는 '내부 부패'다. 매년 반복되는 외국계 기업의 '먹튀'에 대해 "남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윤 대표는 "미국에선 기업들이 작은 부패 행위라도 저지르면 바로 세금을 추징당한다. 강력한 조치가 단행되는 곳에서 핏수가 통할 리가 없다.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행동하는 나라에선 통하지 않으니깐(그런 투기 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판을 치는 것"이라며 "남 핑계 댈 문제가 아니고, 내부 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줄줄 새는 국부...외국인투자법 손 봐야

투자 확대 효과보다 '먹튀' 유발 탈세 막고 재투자 유도해야

외국계 기업의 국부유출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고배당, 법인세 등 고전적 수법에 이어 최근에는 제도적 혜택만 취하고 철수한다는 비판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발이득(Windfall profit)'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세제 지원을 낮추고, 먹튀 자본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계 기업 탈세 구멍 많아 = 최근 국회에선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을 규제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을 마련했다. 하지만 핵심조항이 하나씩 삭제·완화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대폭 후퇴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지만, 국내 거래에 한정됐다는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외국 본사와 한국지사 간 거래인 경우, 예컨대 기술료나 배당·로열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에 송출되는 잉여금의 비율이나 산정에 대해선 해당 기업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셈이다. 매출이나 손익 규모 역시 회사가 주장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기업은 이전 가격을 조작해 법인세를 축소 신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다국적 기업인 만큼 세율이 낮은 나라에 더 많은 이익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8월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

외탈세 혐의자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조연도 잇따랐다. 그동안 정부는 고도기술사업 분야 및 산업 지원서비스업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세제 혜택을 지원해왔다. 이에 내국인 역차별이란 지적이 많다. 실질적 효과도 의문이다. 조세 재정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발이득'이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발상황(외국인 조세 혜택)으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을 우발이득이라 한다. 연구원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재투자 응답 줄고 철수 의향 늘어 =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외국인 재투자를 끌어내는 것이다. 지난해 코트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국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률은 18.8%로 투자 축소보다 6.9%포인트 높다. 투자 확대 응답은 2017년 대비 2.4%포인트 감소했지만, 축소 및 철수는 2.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정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혜택만 누리고 철수하는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국제 투자법상 허용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약속한 투자와 지원 조건의 이행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이러한 혜택을 회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공수처법 협상 결렬... 與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 안돼” VS “후보 나올 때까지 협의” 與, 15개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국민의힘, 투쟁 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요 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담판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거부(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내달 2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기국회가 울스톱될 가능성도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세 차례에 걸쳐 회의했지만 모두 결렬돼 다시 한번 결론에 도달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번 만남에서도 여야는 한 시간 가량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추천

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회동 이후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도 “애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사실상 결렬된 협상의 매듭을 짓기 위해 다시 후보추천위를 소집할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위 재가동에 동의하면서도 논의가 재차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 개정 절차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원 게시판에 처음 인사글을 올리며 “공수처 출범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혁, 공정, 민생, 정의 입법을 재촉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짝이 없다”면서 “더는 늦추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과 이후 출범에 필요한 절차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범법행정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출신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생각이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다가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뿐 아니라 15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히 기업규제 3법(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돌진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보이콧 등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카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울스톱 가능성도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건설노조,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중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임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점거 농성 중인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만난 김 위원장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신중모드

이재명 “본예산에 미리 편성” 김종인 “예상해서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론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국제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역시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매체를 통해 “3차 대유행이 시작될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가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文대통령, 4선 의원 지낸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 일본통 내세워 꼬인 한일관계 풀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주일본 특명전권대사에 강창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제주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를 지냈다. 강 전 의원은 제주를 지역구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과 간사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일대사 교체는 남관표 현 주일대사의 지난해 5월 부임 이후 1년 반 만이다. 문 대통령이 주일대사에 정치인 출신을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학자 출신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번 주일대사 교체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의정 활동 기간 한일의 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일본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한일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며 “고위급 네트워크를 쌓아와 정통 외교관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관계에 다양한 인적관계를 보유한 중견 정치인을 외교관으로 기용함으로써 경색된 양국 관계를 돌파할 방안을 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정일환 기자 whan@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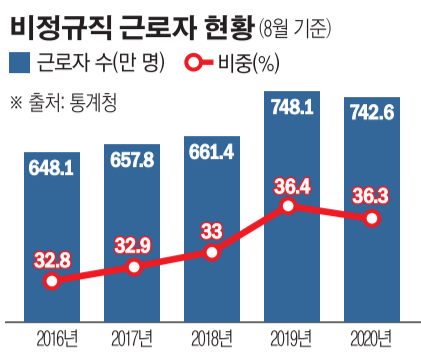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 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KB생명보험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	---	--	--	---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정규직 전환 유도에도... 계약직 4년새 100만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도 3.5%p 증가 고용안전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당초 '무기계약 채용'으로 개정 勞,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촉구



(임금근로자) 수는 2016년 8월 648만 1000명에서 올해 8월 742만6000명으로 94만5000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2.8%에서 36.3%로 3.5%포인트(P)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 파견·용역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을 말한다.

정부가 2016년부터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산 유도에 나서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제근로자(계약직)는 4년 새 약 100만 명이나 늘었다.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간제의 경우 293만 명에서 393만3000명으로 100만3000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책을 펼쳤던 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

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상대로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지침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는 이달 19일 가이드라인을 종전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개정했다. 기업이 상시·지속업무에 최초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상시·지속업무 기준도 기존 '연중 지속 하는 업무로 2년 이상 지속하고, 향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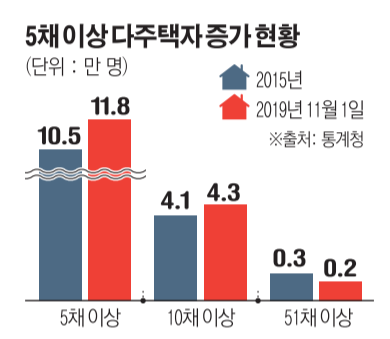
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에서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로 완화했다. 그러나 개정 가이드라인은 권고지침이란 한계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게다가 기업에 정규직 전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가이드라인 이행 거부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 축소 효과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용사유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국회 예결소위 찾은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손을 맞잡고 얘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5채 이상 다주택자 11.8만명

통계 집계 이후 최대 51채 이상 1964명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도 지난해 5채 이상 다주택자가 11만8062명으로 전년 대비 883명(0.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51채 이상 가진 사람도 1964명으로 전년보다 82명(4.35%) 늘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1만8062명으로 전년(11만 7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10만4548명으로 10만 명을 처음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사람도 4만 2868명으로 전년(4만2823명)보다 0.10%(45명) 늘었다. 이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2015년 4만 1036명으로 처음 4만 명대에 진입한 이후 증감을 거듭해오고 있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도 1964명이나 됐다. 1년 전(1882명)과 비교하면 4.35%(82명) 늘었다. 2012년 949명에 불과했던 주

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2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출 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5채 이상, 10채 이상, 51채 이상 다주택자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유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도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 가구 2034만3188가구 중 소유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는 43.6%에 달하는 888만6922가구였다. 이는 전년 874만5282가구보다 1.6%(14만 1640가구)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에선 200만1514가구로 전년(195만5343가구)보다 2.4%(4만6171가구) 늘었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주택 소유 가구(189만4875가구)보다 무주택 가구 수가 많았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월세지출을 첫 증가세 전환... 전세물량 감소 여파

자가·전세가구 포함 3분기 실제주거비 월 8만4200원

3분기 가구의 월평균 실제주거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23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제주거비 지출은 월평균 8만42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 상승했다. 이는 자가·전세 가구를 포함해 산출한 평균치로, 실제 월세 가구의 주거비 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다. 가구당 실제주거비 지출은 1분기 8.0% 하락했으나, 2분기 1.8%로 하락폭이 축소되고 3분기엔 상승으로 전환됐다. 실제주거비 지출은 월세와 기타의제주거비의 합계다. 단 기타의제주거비는 무상주택, 영구임대, 사택 거주자가 유사한 시설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비용으로 실제주거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따라서 실제주거비 지출의 상당 부분은 월세 지출이다. 소득 분위별로 1분위(하위 20%)와 2분위에서 각각 9만5500원, 9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1분위의 경우, 월세 가구의 비중도 전년 동월보다 확대됐다. 3~5분위에선 월세 거주자가 적어 실제주거비 평균값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3분위는 7만5600원, 4분위는 6만9600원이었으며, 5분위(상위 20%)는 8만4100원이었다. 5분위의 실제주거비가 3~4분위보다 높은 건 고소득층 일부가 재산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초고가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물량 감소에 따른 월세 가구 증가와

반전세 전환 등에 따른 월세 상승이 실제 주거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세 자체가 오르는 추세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월세 품목의 상승률은 올해 3월까지 마이너스였다가 4~5월 보합, 6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6월 0.1%에서 10월 0.3%로 상승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소비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이 늘기 어려워졌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가구의 주거비 추이 보고서에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비의 부담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 소비 지출 및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구제역 백신 국산화 초읽기

시제품 생산, 품질평가 진행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품질 평가를 거쳐 조만간 상업화 백신을 만들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평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백신의 효능 평가 등 여러 가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톤 단위로 생산하는 본생산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생산한 시험용 제품이다. 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종의 구제역 백신 종자바이러스를 개발해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험생산 규모(100 l)의 제조공정 기술을 확립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보유한 백신연구시설을 이용해 구제역 2가 백신(O형 보은주+A형 연

천주) 시제품을 생산했다. 구제역 O형 보은주와 A형 연천주는 국내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형 구제역 백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구제역 O형 보은주는 국내에 유입 가능한 O형의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광범위한 방어 효과를 나타낸다. 또 백신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안티바이러스 리서치(Antiviral Research)'에 실리기도 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시제품 백신은 접종량을 2ml에서 1ml로 줄여 접종 부위의 국소반응을 최소화했고 기술개발을 통해 근육 이상과 같은 백신 부작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시제품은 바이러스 방어 효과, 면역 지속기간 확인, 안전성 평가 등 여러 추가적인 시험을 거쳐서 상업화 백신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내년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국경일 '유급휴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유급휴일)로 보장받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8년 3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휴일 증가에 따라 올해에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첫 적용됐다. 2022년에는 5~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

게 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다. 민간기업은 해당 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유급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특정에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

해야 한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시 50%·8시간 초과 시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런 집 처음 EASY?



내 집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처음 살 땐 시세의 반의 반값으로 사고
20~30년 동안 나눠서 갚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

연리지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으로
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SH가 연리지의 가지처럼 함께하는 정책임을 표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 국내 최초 지분적립형 주택
2028년까지 서울에 1만 7천호 공급
- 반의 반값 아파트
시세의 80%내외 X 지분율 20~40%로 저렴 분양
- 4년마다 형편에 맞게
4년마다 15~20%씩 형편에 맞게 지분 추가 획득
- 처분 자유, 언제든지 매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지분전체 제 3자에게 매각가능
- 장기 보유, 자산형성 지원
처분시점의 지분비율대로 금액분할

SH의 [생애주기별] 신개념 주택정책 브랜드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청년에서 노년까지 전 세대 맞춤형 주택 공급체계 구축

2030세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신호 SMART HOUSING	청년과 신혼부부의 호~음 청신호
2030세대 청년창업가	ablub 에어블럽	청년 창업지원 도전속 시즌2 에이블럽
3040세대 무주택세대	연리지 HOME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5060세대 노후세대	누리재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



연리지
HOME

中 '국가주도 성장' 폐해 국유기업 줄줄이 디폴트

中 기업 채무불이행 규모 26.7兆 화천그룹·칭화그룹·융청전력 등 디폴트 기업중 국유사 40% 달해 금융당국, 자성 대신 '무관용 엄벌'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중국의 국유기업 경영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중국 기업 상당수가 국유기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제(管制)'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3일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일 현재 중국 기업의 디폴트 규모는 1570억 위안(약 26조 67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중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지난해 연간 채무불이행 규모가 1670억 위안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올해도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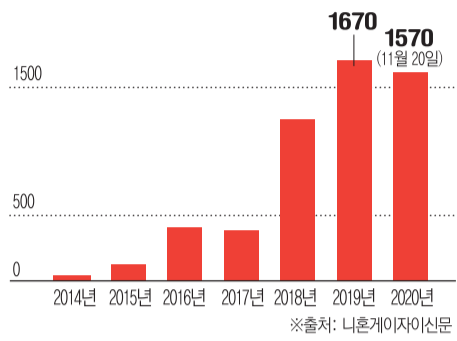
이같은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던 중국 정부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자 지원 규모를 줄이면서 시작했다. 특히 정부 의존도가 높은 국유기업들은 지원이 줄자 가뜩이나 심각한 부채에 허덕이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영 자동차회사 화천자동차그룹이다. 화천자동차는 중국 라오닝성 정부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BMW와 중국 브릴리언스의 합작사로 유명하다. 화천자동차는 지난해 말 만기였던 10억 위안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해 20일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아직 갚아야 할 채무도 160억 위안 넘게 남았다.

중국 반도체 굴기 상징이었던 국유기업 칭화유니그룹 역시 16일 만기였던 13억 위안을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에 빠졌다. 무엇보다 칭화유니그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표방하는 반도체 자급자족화의 주역으

중국 회사채 디폴트 규모 추이

(단위 : 억 위안)



로 평가받았던 만큼 시장의 충격은 더 컸다. 이외에 허난성의 국유기업 융청석탄전력 역시 이달 10일 만기였던 10억 위안 규모의 부채를 갚지 못해 같은 처지에 놓였다.

닛케이에 디폴트 규모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체 디폴트 가운데 국유기업이 차지한 규모는 약 400억 위안으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이미 이 금액에서 1.8배 증가해 전체의 40%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 시장 붕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다.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금융시스템 위기는 없을 것"이라며 국유기업들의 자금 유동과 탈세 등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는 크다. 글로벌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랏차드 중국 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디폴트를 낸 융청석탄전력이 신용평가에서 'AAA'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정부 지원에 의해 신용 리스크가 크게 왜곡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바이든, 국무장관에 '외교통' 블링컨 내정

20년 지기 참모... 트럼프 불복선언 무시, 인선에 속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도 이렇듯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4일(현지시간) 인선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새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외교통' 토니 블링컨(58)을 지명키로 했다고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과 20년 지기로,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상원 외교위원회 참모장을 맡았으며, 2008년 대선 경선 당시 바이든 캠프에 몸담기도 했다. 빌 클린턴 전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전담했고, 오바마 행정부 2기엔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부통령이던 바이든과 호흡을 맞췄다. 이번 대선 기간엔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수석 고문을 맡는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권하에서 균열이 생긴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과 국제

공조를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블링컨을 국무장관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CNN방송은 "블링컨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대한 대응 등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적 중추 역할을 했다"며 "상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블링컨은 전 세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국제적인 리더십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국 정부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블링컨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20년간 바이든 편에서 서서 중동의 격변에 맞선 미국의 외교적 대응을 발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AP뉴시스

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이와 함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제이크 설리번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앞서 론 클레인 신임 비서실장 임명자는 내각 인선이 24일 공식 발표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아직 상원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내정자의 최종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 48석을 차지,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 향방이 달랐다.

고대영 기자 kodae0@



찾는 이 없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프랑스 대부분 지역에 이동제한령이 떨어졌지만, 파리의 관광 명소 샹젤리제 거리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켜졌다. 예년 같으면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제한으로 한산하다. 22일(현지시간) 화려하게 켜진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은 내년 1월 6일까지 볼 수 있다. 파리/EPA연합뉴스

현금 쌓던 美 기업 '배당금 지급' 재개

"코로나禍 경제붕쇄 없다" 안도... 배당 늘린 기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금 확보에 집중했던 미국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500지수에 포함된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42곳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올해 초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 중 6개 기업은 3분기 실적 발표 후 배당금을 다시 지급키로 했고, 나머지 기업 중 배당금 지급 재개 일정을 공개한 곳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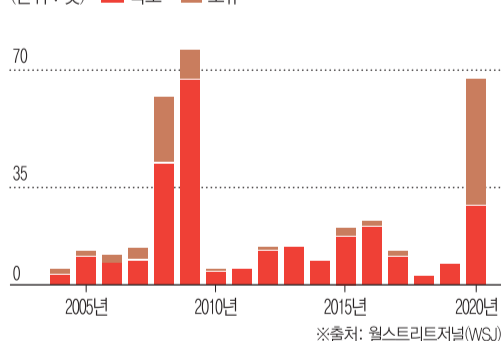
미국 대형 백화점 체인 월마트는 9월까지만 해도 "지속적인 불확실성 탓에 현금 보유량을 유지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자 배당금을 내년 1분기부터 지급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석유회사 매러슨오일은 5월 배당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다음 달부터 다시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금 지급 중단과 임대료 납부 기한 연기, 신용 한도 내 현금 인출 등 가진 수단을 총 동원해 버티기에 들어갔던 의료업체 겐은 내년 초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제너럴모터스(GM)와 에스티오더, 다트레스토랑, 와이아하우저도 내년 중순부터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S&P500 기업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 곳) ■ 축소 ■ 보류



심지어 배당금을 늘린 기업도 있다. 마살스와 흡곳즈의 모기업인 유통업체 TJX다. 어니 허먼 TJX CEO는 "우리는 장기 전망에 매우 낙관적"이라며 "3월보다 13%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도 강도는 경계 봉쇄는 시행되지 않으리란 믿음이 시장에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배당금 지급 중단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이라며 "배당금 지급 재개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췄다는 안정감에서 비롯된다"고 전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에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국적 기업들이 한숨 돌리고 있다"며 "기업의 배당금 지급 재개는 경영진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고 여기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혜림 기자 rog@

美 "내달 11일 첫 백신 접종... 5월 집단면역 기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11일 시작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워프 스피드' 팀의 몬세프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12월 둘째 주부터 미국에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24시간 내 백신을 공급해 대략 12월 11일이나 12일에 사람들이 첫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DA는 다음 달 10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해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허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백신은 주(州)별 인구 수에 따라 배포되며, 접종 우선 순위는 각 주가 결



몬세프 슬라위 '워프스피드 작전' 최고책임자. AP연합뉴스

정하게 되는데, 의료 종사자나 고령자 등 감염 위험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된다.

슬라위는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 5월께 집단면역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화이자와 모데나의 백신 효과를 고려할 때, 인구의 70% 정도가 면역력을 갖는다면 집단면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5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집단면역을 달성하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5월 집단면역이 생길 수 있다는 슬라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국민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최종 임상시험에서 95%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FDA의 승인이 나면 몇 시간 이내에 공급 체계를 갖춰 연내에 25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을 생산할 방침이다. 일본이나 유럽 등 각국 당국에도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미국의 또 다른 제약사 모데나도 조만간 FDA에 백신의 긴급 사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미국에서는 7일 이동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21일에 16만9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은행聯 새 사령탑 김광수... 숙제로 남은 '관피아 논란'

회추위, 관피아·정피아 논란 우려 추대 아닌 투표로 최종후보 선정

은행 "민·관 금융권 경험 많아 업계 대변·당국과 소통 적임자"



회추위는 곧이어 열리는 회원사 이사회(회추위원과 동일) 의결 절차와 2~3일 뒤 회원사 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을 결정한다.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KDB산업·IBK기업·SC제일·한국씨티·경남은행 등 10명의 은행장을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김광수<사진> NH농협금융회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확정됐다. 관료 출신이면서 금융권 경험이 많은 김 회장이 관피아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당국의 입김에서도 어느정도 자유롭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금융업계 보다 관료적 성향이 짙은 만큼 금융권에 만연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3일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차기 은행연합회장 단일 후보를 결정했다. 이날 회추위 위원들은 기존 추대 방식 대신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관피아, 정피아(정치+모피아) 논란을 의식한 탓이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선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 정무위원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7명이 1차 후보군(롱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이 전 행장이 사퇴하면서 6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김 회장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쳐 지난 2018년 4월부터 NH농협금융 회장을 맡고 있다. 공직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관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만큼 '관피아' 비판 여론으로부터 경쟁 후보들에 비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김 회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행정고시 27회 동기다.

관료적 성향과 농협금융을 맡으면서 쌓

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교감하는 동시에 업계의 이해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관료 출신을 선호했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조율할 과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은행연합회장 자리가 관료출신 인사가 대거 유입되면서 관피아 논란을 재기하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장에는 관료 출신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가 내정됐고,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서울보증보험의 차기 사장을 맡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으면서 관피아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관피아 논란이 확산되면서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들이 중도에 대거 이탈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직접 차기회장을 고사했다. 1순위 후보였던 최중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1차 회

추위 직후 김태영 회장에게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과 13일에는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윤대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고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역대 회장의 면면을 보면 관피아의 절대 우세다. 5대 이상철 회장(국민은행장), 8대 신동혁 회장(한미은행장), 12대 하영구 회장(씨티은행장)을 제외하면 전직 관료출신들이 압도적이다. 관료출신 회장이 많았던 이유는 규제·면허 사업인 은행업의 특성 탓이다. 힘센 관료출신 회장이 맡아야 은행들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 관피아 논란이 커지면서 차기 협회장 선출에 난항을 겪었는데 김 회장은 관과 민간금융업계를 두루 경험한 만큼 경쟁 후보자들과 비교해 장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현안이 산적한 금융권에 업계 의견을 대변하면서 금융당국에 어느정도 입김을 낼 수 있는 적합한 인물 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에 김철웅 선임

전문심의위원회에 장석일 임명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권익보호 신임 부원장보에 라임 100% 배상을 이끌었던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을 선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권익보호 신임 부원장보에 김철웅(55) 분쟁조정2국장과 전문심의위원회에 장석일(55) 회계심사국장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4일로, 신임 부원장보(전문심의위원) 임기는 3년이다. 전임자인 정성웅 부원장보와 박권추 심의위원은 2017년 11월 20일 임명돼 3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김 신임 부원장보는 전라고, 연세대 경영학 학사 출신으로 199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2007년 금감원 비서실 팀장으로



김철웅 장석일

옮겼다. 이후 워싱턴주재원, 특수은행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등을 거쳐 분쟁조정2국장으로 지냈다.

특히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이란 전례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장 신임 전문심의위원은 하성중합고, 연

세대 경영학 학사 출신으로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이후 회계감독국, 회계심사국 등을 거친 회계분야 전문가다.

금감원은 "이번에 새로이 임명된 임원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그리고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들"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임 부원장보 선임은 윤석현 금감원장의 마지막 간부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현 금감원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3월 소비자피해예방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한편 부원장보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을 교체했다.

서지연 기자 sij@

신한금융, 민관 수소충전소 사업 본격화

지역난방공·현대차 등과 코하이젠 설립 MOU

신한금융그룹은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코하이젠' 설립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현대차를 비롯해 주요 에너지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코하이젠은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정부와 현대차 등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이다. 내년 2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코하이젠은 전국에 기체 방식 상용차 수소 충전소 10개와 액화 수소방식 수소 충전소 25개 이상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신한금융은 이번 협약으로 각 참여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참여사들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계획과 자본조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며 친환경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제 웹오피스
-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LG 이번 주 인사...관심은 '구본준 독립' '배터리 CEO'


구광모 회장 '변화 속 안정' 추구
권봉석 사장, 부회장 승진 가능성
배터리 수장 김중현·김명환 거론

LG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포인트

구본준 고문 독립
- LG상사, 판토스, LG하우시스 계열분리

LG에너지솔루션
- LG화학서 LG에너지솔루션 계열분리
- 신임 CEO 임명

부회장단 변화
- 권영수 LG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유임 여부
- 권봉석 LG전자 사장, 부회장 승진 가능성



LG그룹이 이번 주 인사를 단행한다. 2년 연속 사장단에 변화를 준 구광모 LG 회장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안정' 기조에서 벗어나 계열 분리와 함께 '변화 속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이달 2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조직개편과 함께 사장단과 임원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LG 그룹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계열사 사업보고회를 지난주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구본준 LG 고문의 독립이다. 구 고문은 LG상사와 LG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이끌고 계열 분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고문은 LG 지주사인 ㈜LG 지분 7.72%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가치는 약 1조 원으로 평가된다. 구 고문이 이분을 활용해 LG상사와 LG하우시스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독립할 가능성이 거

론된다.

앞서 LG상사는 지난해 LG 여의도 트윈타워 지분을 ㈜LG에 팔고 LG광화문빌딩으로 이전했다. 또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들은 LG상사의 물류 자회사인 판토스 지분 19.9%도 매각하는 등 계열 분리 사전작업을 해왔다.

LG그룹은 장남이 그룹 경영을 이어받고, 동생들이 계열사를 분리해 나가는 '형제 독립 경영' 체제 전통을 이어왔다. 구 고문은 고(故)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며,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다.

계열 분리 등의 큰 변화 속에서 기존 주력 계열사들의 CEO(최고경영자)는 안정을 위한 유임이 예상된다. LG는 2018년 구광모 회장 취임 후 작년과 재작년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등 주력 계열사 CEO를 대거 교체했다. 구 회장 체제 3년째를 맞은 올해는 안정기

에 접어들면서 큰 폭의 인사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권영수 LG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4명의 부회장단은 유임 가능성이 접쳐진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말 임기만료를 맞는 하현회 부회장의 거취 변화도 거론된다.

LG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6인 부회장 체제였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퇴임하면서 4인 부회장 체제로 바뀌었다.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의 부회장 공석이 발생하면서 권봉석 LG전자 사장의 조기 부회장 승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에도 실적 향상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전자는 코로나19에도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16조9196억 원)과 영업이익(959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역대 분기 기준 두 번째다. 영업이익은 역대 3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권 사장은 2018년 사장으로 승진해 재임 기간이 짧아서 부회장 승진보다는 사장 자리에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퇴진한 조성진 부회장도 2013년 사장 승진 후 4년 뒤인 2017년에 부회장에 올랐다.

LG화학에서 떨어져 나온 'LG에너지솔루션'의 새 수장에 누가 앉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김중현 전지사업본부장과 김명환 전지사업본부 최고구매책임자(CPO) 겸 배터리연구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에너지솔루션의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에서 물적 분할된 배터리 사업부문 자회사로 내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국타이어, GM 신차 타이어 계약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제너럴 모터스(GM)의 픽업트럭 2021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헤비듀티'와 'GMC 시에라 헤비듀티' 모델에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 '다이나프로 MT2'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

23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쉐보레 실버라도 헤비듀티'와 'GMC 시에라 헤비듀티'는 서로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모델로, 강력한 엔진 성능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북미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정통 픽업이다.

이번에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하는 '다이나프로 MT2'는 그립 성능과 구동력을 통해 가파른 험로를 헤쳐가는 등 오프로드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트레드(타이어의 접촉면)의 모서리 부분과 사이드월(타이어 옆면)이 이어지는 부분에 V자형 돌출 고무 블록을 적용해 강인한 외관 디자인과 함께 강력한 구동 성능을 제공한다. 사이드월에 범퍼 프로텍터를 적용해 주행 중 외부 충격에 대한 강도를 강화했으며, 진흙과 돌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홈을 설계했다. 이 밖에도 최적화된 트레드 블록 디자인으로 비포장도로에서는 물론 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CJ대한통운 '우수선화주' 인증

CJ대한통운이 해운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선화주'란 해운선사와 이들에게 화물의 운송을 맡기는 화주기업인 국제물류기업 또는 수출입기업을 뜻한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국적 해운선사와 화주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 조성을 유도하고 해상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CJ대한통운은 그간 15개 국적선사 모두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힘써왔다.

이주혜 기자 winjh@

삼성중, 2조8000억 단일 선박 최대 규모 계약

유럽 쇠빙LNG선 블록 공급...수주 목표 45% 달성

삼성중공업이 2조8000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를 한 번에 따내며 연말 수주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23일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약 2조8072억 원) 규모의 선박 블록과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ARCTIC(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연간 1980만 톤의 LNG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아틱 LNG-2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쇠빙 LNG선 10척 수주가 유력했다. 지난해 9월에도 삼성중공업은 아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운반선의 기술파트너로 선정돼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했

다. 같은 해 11월에는 쇠빙LNG선 5척에 대한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수주목표의 절반(45%)을 달성했다. 현재까지 누계 수주실적은 총 38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수주잔고는 211억 달러로, 올해 6월 말 기준 19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삼성중공업은 17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총 1946억 원 규모의 수에즈막

스(S-Max)급 원유운반선 3척을 수주했으며 8월에는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세계 최대 크기인 98K급 초대형 에탄 운반선 VLEC 2척을 약 2억2000만 달러(약 2614억 원)에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6척을 수주했으며 이번 계약으로 대규모 블록 공급 계약을 추가하게 됐다.

연내 추가 수주도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 카타르 등 대규모 LNG 프로젝트에서의 수주가 유력하고, 최근 발주가 재개된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등에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현대차·英 화학기업과 유럽 수소밸류체인 구축 MOU

각각 연료전지·수소생산 담당 현지 개발 SUV에 시스템 탑재

현대자동차가 영국의 종합화학기업 이네오스그룹(INEOS)과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현대차는 20일 알버트 비어만(Albert Biermann)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 사장,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 전무,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 이네오스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네오스는 석유화학, 특수화학, 석유제품 생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종합 화학기업이다. 현재 연간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며,



온라인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알버트 비어만(왼쪽) 현대차 사장과 피터 윌리엄스 이네오스 CTO.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분야를 확대하려 노력 중이다.

우선 양사는 이네오스 산하 이네오스 오토모티브가 개발 중인 SUV '그레나디어(Grenadier)'에 현대차의 차량용 연료전지시스템을 얹어 새로운 수소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수소 관련 사업 기회 창

출을 통한 유럽 내 수소 경제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유럽은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전해 시설을 구축해 그린 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저장, 유통, 운송, 충전 등 수소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

힌 바 있다. 이 같은 유럽 내 움직임에 발맞춰 양사는 MOU 직후 핵심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고 유럽연합, 유럽 각국 정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며 사업 기회 모색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이네오스는 자회사 이노빈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 공급, 저장, 유통, 현대차는 연료전지시스템 공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는 이네오스의 화학 분야 기술력과 현대차의 연료전지시스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유럽은 물론 향후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6월 사우디 아라코에 이은 이번 이네오스와의 협력이 향후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기아차, 전기차 점유율 2계단 올라 4위



기아자동차 니로 EV.

테슬라·폭스바겐·르노닛산 다음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순수전기차) 시장 점유율 4위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며 향후 양사의 판매 확대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1~9월 세계 77개국에서 전기차 13만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7.2%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3000대)보다 40.7% 늘어난 수치다.

점유율은 지난해 5.7%에서 1.5%포인트 올랐고, 6위에 머물던 순위도 두 계단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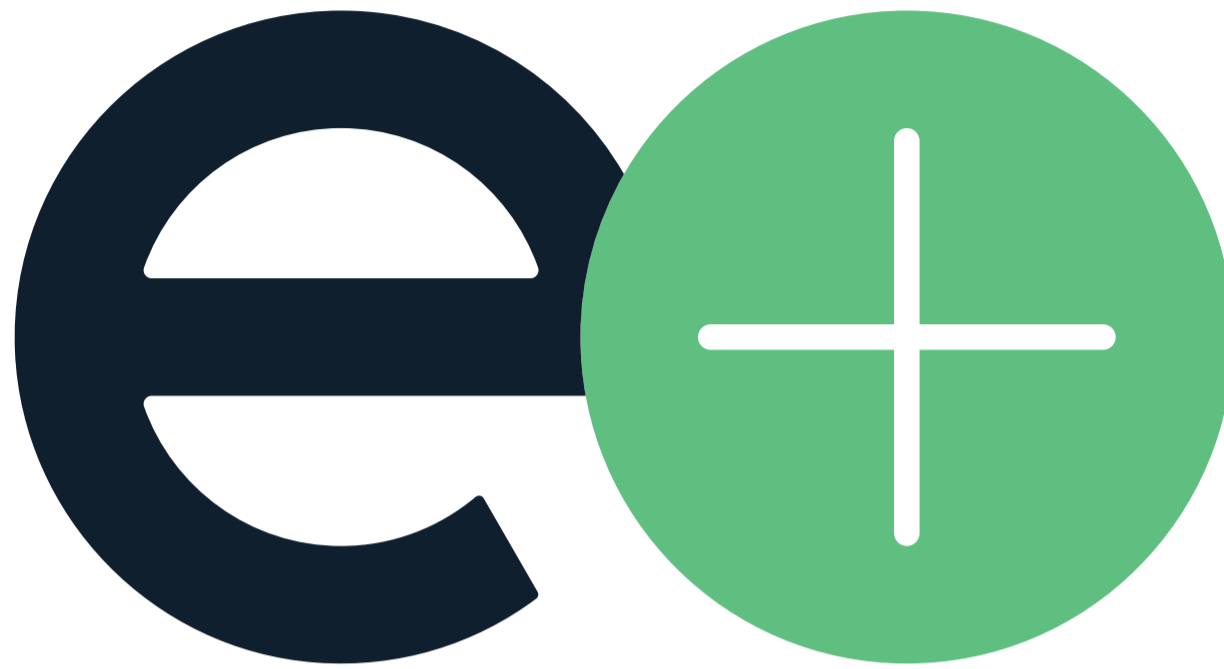
현대차 코나 EV와 포터2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 EV와 시드 PHEV 등 주력 차종의 판매가 늘어난 점이 판매량과 점유율

상승을 견인했다.

점유율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차지했다. 테슬라는 9월까지 총 31만6000대를 판매하며 17.5%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폭스바겐 그룹(23만3000대), 르노-닛산-미쓰비시(14만800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위를 차지한 BMW 그룹은 판매량이 11% 소폭 올랐지만, 순위는 5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유창욱 기자 woogi@



energy plus

GS 칼텍스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환경과 고객변화에 발맞춰
지금과는 다른 확장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순 없을까?

그래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에 좋은 에너지가 되는
'에너지플러스' 브랜드로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차량 자동인식, 주유 간편결제로 편리함을 높이는 에너지플러스 모바일서비스
(비콘인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EV충전, 수소충전, 마이크로모빌리티, 물류거점 서비스 등)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

글로벌 항공 빅5, M&A로 자금 부담 컸지만 시너지

노스웨스트항공 합병한 델타
작년 매출 475억 달러 업계 1위
대한항공, 코로나 악재 있지만
3년 후엔 아시아나 인수 효과
“중장기적 시장 지배력 확대”

순위	항공사	2019년 매출	주요 M&A
1	델타항공	475	2008년 노스웨스트항공과 합병
2	아메리칸항공그룹	457	2014년 US에어웨이스와 합병 후 통합
3	유나이티드항공	432	2010년 콘티넨탈항공과 합병
4	루프트한자그룹	407	2000년 이후 유럽 역내 항공사 인수
5	에어프랑스-KLM그룹	305	2004년 네덜란드 항공사 KLM 인수

* 출처: 에어포트테크놀로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구체화하면서 해외 항공사들의 인수·합병(M&A) 사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서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7년 에어베를린을 인수한 독일 대형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이후 실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 제2 민항사로 꼽힌 저가항공사(LCC) 에어베를린이 파산하게 되자 LCC 유로윙스를 보유한 루프트한자는 이를 인수했다.

2017년 루프트한자의 순이익은 23억 4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였으나 에어베를린 인수 후인 2018년에는 8% 하락한 21억6300만 유로에 그쳤다. 루프트한

자는 “에어베를린 통합과 관련해 일회성 비용 1억7000만 유로가 발생하면서 유로윙스 실적에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말 US에어웨이스와 합병한 미국의 아메리칸항공도 첫해인 2014년 통합 관련 비용으로 2억8000만 달러(약 3120억 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인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통합이 바로 시너지를 낼 수는 없다”면서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M&A는 성장의 발판으로 평가받는다. 델타항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델타항공은 파산까지 갔으나 2008년

노스웨스트항공사와 합치면서 덩치를 키워 세계 최대 항공사로 올라섰다.

항공전문매체 에어포트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지난해 매출 475억 달러로 전 세계 항공사 매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아메리칸항공그룹(457억 달러)이 차지했으며 유나이티드항공(432억 달러), 루프트한자그룹(407억 달러), 에어프랑스-KLM그룹(304.5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매출 기준 세계 최대 항공사 1위부터 5위까지 항공사가 모두 대형 인수합병을 경험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2010년 콘티넨탈항공과 합병했으며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는 2004년 네덜란드 항공사

KLM을 인수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도 당분간 험난한 길을 걸을 전망이다. 통합 부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앞선 항공사 인수합병보다 힘든 환경에 처해있어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객 수요가 늘어나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수요는 당분간 살아나기 힘들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전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올해 9월 말 기준 2309%에 달한다. 1년 내 상환 의무가 있는 유동부채는 5조1847억 원이다. 자본잠식률은 50%이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 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책정한 금액은 2조 원이 넘는다.

우기훈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장기적인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당장 1, 2년은 어렵겠지만 3년, 5년이 지난

다면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운송에 힘입어 영업이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우 사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실적이 좋다”며 “코로나 시기에는 화물 사업을 강화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는 대한항공에 부담 요인”이라며 “하지만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국적 항공로서의 위상 확대, 이에 따른 수익 구조 개선 가능성 등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미주 노선이 비슷한 시간에 운항하는 등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시장 지배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고부가가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한영대 기자 yeongdai@

YouWho

아시아 유일!! 국내 최초!!
DNA 혈통분석 서비스

그것을 아십니까?
한국인이라도 다양한 인종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유호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에서 개발한 DNA 분석 서비스로서 민족 특이적인 유전정보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분석해 개인의 유전적 조상 계보를 알려줍니다. 국내 전체 유전체 기업 중 유전자 혈통 분석이 가능한 기업은 EDGC가 유일합니다.

2020 레드닷 어워드 수상
Designed by B for Brand
www.b-forbrand.com

제품상담 : 032-713-2128
구매문의 : www.youwho.co

NAVER

나의 DNA와 6대륙 22개 민족 95개 국가 원주민 DNA를 비교합니다.
나의 부계 7개 그룹, 모계 12개 그룹의 유전적 혈통을 알 수 있습니다.
30억 장 DNA 염기서열 기반 70만여 개의 핵심 유전자 빅데이터의 결정체입니다.

Cell-free DNA기반 토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 토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Cell-free DNA(세포 유리 DNA) 분석기술 기반, 질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는 최첨단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구조조정 없는 ‘빅딜’ 대한항공, 새길 개척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력 유지
합병 시 감원하는 외국과 대조**

대한항공이 과거 빅딜을 했던 외국 항공사들과 달리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 등 최고 경영진들이 직접 나서 구조조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형 인수 합병을 했던 일부 외항사들은 빅딜 직후 경영난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했다.

2008년 노스웨스트항공을 사들인 미국 델타항공은 합병 이후 감원을 시행했다. 인수 이전에도 약 4000명을 감원했는데 추가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 인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영향이다.

2010년 콘티넨탈항공을 인수한 미국 유나이티드항공도 구조조정을 했다. 구조조정 대상자에는 주요 경영진도 포함됐다. 감원 이후 2010년 유나이티드항공의 직원 수는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콘티넨탈항공의 직원 수도 7.6% 줄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2017년 에어베를린을 인수하면서 에어베를린 직원 8500명 중 3000명만 고용 승계했다. 외항사들의 전례 때문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5개 노선은 16일 대한항공 발표 이후 곧바로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각의 우려에 대한항공은 일찌감치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조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까지 양사 중복된 인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 “노선과 사업 확장성을 고려하면 현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우기훈 대한항공 사장 또한 20일 “대한항공이 창사 51년이 됐는데 그동안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 번도 한 적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해도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근로자, 노동자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2월부터 9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나 한 명의 직원도 인위적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라며 “노조가 이에 관해 우려가 있다면 오해를 풀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고가 비교적 쉬운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한항공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항공은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화물 사업에 집중해 수익 방어에 나선다. 화물 사업을 둘러싼 환경도 긍정적이다. 4분기 화물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운임은 계속 오르고 있다. 홍콩에서 발표하는 TAC 항공운임지수에 따르면 홍콩-북미 노선 기준 지난 달 평균 화물운임은 kg당 5.66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3.49달러)과 비교했을 때 62% 증가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더욱 늘어날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대한항공은 지난 달 화물사업본부 내 백신 수송 관련 업무를 다루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준비 기간만 2년... SK매직, 내년엔 IPO 성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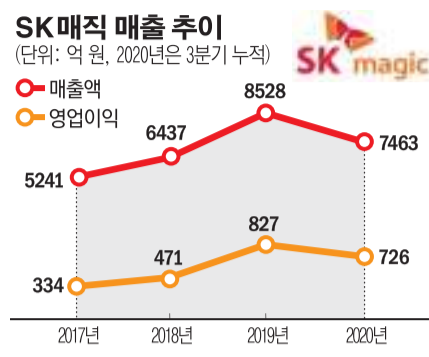
올 매출 1조원·렌탈 누적계정 200만명 돌파 기대감 국내 3대 신협사서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잇따라 내년 말 상장 목표... IET에 밀려 추가연기 가능성도

SK매직이 연 매출 '1조 클럽'을 목전에 두면서 2년 간 준비해온 IPO(기업공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내년 말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3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SK매직의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이 기존 A0(안정적)에서 A0(긍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상향 배경은 △렌탈사업 계정 수 증가로 사업안전성 강화 △우수한 유동성

대응 능력이다. SK매직은 6월과 9월에도 각각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A0(안정적)에서 A0(긍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탄탄한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인정받으면서 2년 전부터 준비한 IPO(기업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SK매직은 2018년 미래에셋대우, KB증권, JP모건 등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며 IPO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앞두고 SK바이오팜이 우선 상장하게 되면서 일정이 순연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기업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 공모는 일

년에 한 두 번으로 제한하는 등 공모 일정에 간격을 둔다"며 "SK그룹 계열사 중에는 SK매직이나 SK IET가 내년 상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팜 상장이 마무리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던 SK매직에도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내년 하반기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SK매직은 올해 '1조 클럽'을 앞두고 그룹 내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분기 누적 매출액 7463억 원, 영업이익이 72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8528억 원의 87%에 달하는 수치다. 렌탈 누적계정은 196만으로 올해 목표인 매출액 1조 원과 누적계정 200

만을 동시에 돌파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미래 산업군으로 2차전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 IET)에 대한 우선도가 높아진 만큼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SK매직과 SK IET 모두 현재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근 SK IET는 미래에셋대우, JP모건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을 위한 세팅은 모두 끝났지만, 그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다"며 "늦어도 내년 말 상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 변수로 내후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KT, 산학연 16곳과 함께 '클라우드 원팀' 결성

서울대·ETRI·케이뱅크 등 참여... "토종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

KT가 학계, 산업계와 클라우드 원팀(Cloud One Team)을 결성했다.

KT는 23일 서울 광화문 KT East 사옥에서 산학연 16개 기업 및 기관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과대,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주분원,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다. 산업계는 KT를 비롯해 케이뱅크은행, 나무기술, 소만사, 팬타시 큐리티시스템, 솔트룩스, 킬론, 제노솔루션, 새하컴즈, 아롬정보기술, 티맥스에이앤씨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홍범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부사장, 윤동식 KT Cloud/DX사업단장 전무, 이길행 ETRI 호남권연구센터장, 박세용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장, 문수복 카이스트 학술문화원장, 홍원기 포항공과대 교육혁신센터장, 김도완 케이뱅크은행 ICT 본부장, 권운범 나무기술 영업본부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토종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원팀은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달 '경영진 간담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우선 발굴하기로 했다. 이 사업모델로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성, 안정성을 갖춘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토종 클라우드 산업의 뿌리인 인재 양성과 함께 한다. 학계와 산업계의 활발한 인력 교류로 상호 보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풍부한 지적 재산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각 참여기관은 연구개발(R&

D), 핵심 기술 개발, 선도적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사례 배출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 및 적용한다.

클라우드 원팀 사무국은 KT에 신설된다. ECO 상생 지원단과 산업, 솔루션, R&D 3개 혁신 분과, 1개 지원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KT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력과 운용·컨설팅 역량으로 클라우드 원팀 참여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구글, 신규 앱 '30% 수수료' 연기

업계 거센 반발에 '내년 1월→9월 말'

기존 앱은 예정대로 10월 적용

애플이 지난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결정하던 가운데 구글이 23일 신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부과 정책을 내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구글은 2021년 1월부터 신규 앱 내에서 결제 발생 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비율이 과소평가돼 있으며, 콘텐츠 제작자들이 구글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유예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30일까지다.

구글은 수수료 부과 정책 유예에 대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을 활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앱의 경우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10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운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 강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TF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구글 측이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개발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여러 의원들이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취임 1년 맞은 이용훈 UNIST 총장 "인공지능·친환경 기술 선도하겠다"

"울산을 최고 그린수소 도시로... '실증화 연구센터' 유치"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속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친환경'의 두 기술로, 앞으로의 사회를 좌우할 것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용훈(사진) 총장은 23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특히 친환경 이슈는 당위를 넘어 과학기술계가 헤쳐나가야 할 당면 과제이며 '기술혁신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UNIST의 경우,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개발(R&D) 역량을 토대로 내년부터 담대한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친환경 관점에서 울산을 '세계 최고의 그린 수소 도시'로 만드는 것과 '인구 1인당 오염원 배출 최소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도시'에서 진정한 의미의 '제조도시'로 재탄생하는데 총장으로서 진두지휘한다는 각오다.

첫 번째 구상은 울산에 '그린 수소 실증화 연구센터' 유치하는 것이다.

그는 "실증화 사업이 정착되면서 울산이 세계 최고의 그린 수소 도시로 공인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총장은 울산공단 오·폐수 재사용, 산업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오염원을 재생자원으로 되바꾸는 과제다. 이 역시 UNIST의 도시환경분야 연구진 10여 명이 정책 제안과 단계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총장은 "울산시와 구체적인 그린 뉴딜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제시할 정책 제안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UNIST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차전지, 태양전지, 해수전지 등 미래 에너지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 이슈는 최근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 및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2030년 내지 2050년을 '탄소제로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하는 등 그린 뉴딜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편 이 총장은 취임 후 1년간 '울산의 디지털 뉴딜'에 전력을 쏟았다. 인공지능 대학원 유치 및 인공지능 혁신 파크 추진, 반도체 소재부품 융합 추진단 및 대학원 유치 추진,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센터 추진 등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연말정산·세금납부도 카톡하세요"

카카오엔터, AI 챗봇 앞세워 '공공 IT인프라' 시장 도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i 커넥트' 특 AI 챗봇이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 IT 인프라 시장에 본격 진출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카카오톡과 챗봇 등을 활용해 빠른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이 10월 5일 시행한 제도다. 기존에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절차를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입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를 빠르게 검색·선정하고 구매할 수 있기에

문에 공공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i 커넥트 특 챗봇의 강점은 이용자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력과 동시에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 i 커넥트 특 AI챗봇'은 기존 챗봇보다 뛰어난 문장 인식·이해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용자의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을 보여준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카카오 i 커넥트 특 챗봇"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첫 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서비스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 i 커넥트 특 챗봇'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atio@

요기요, 생필품 배달 영토확장에 '편의점 울상'



배달앱 요기요의 생필품 배달 서비스 '요마트'가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대부분의 편의점들이 요기요 배달 서비스에 입점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편의점과 배달앱 간 갈등과 경쟁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3일 딜리버리코리아하이어로에 따르면 요기요는 '요마트' 사업 대상 지역을 서울 영등포구와 송파구, 관악구로 확대, 1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9월 서울 강남구에 테스트 형식으로 도입한 후 2개월 만에 서울 4개구로 사업을 확대한 것. 요마트 간편요리를 비롯해 과일·샐러드, 과자, 라면 등 생필품을 빠르게 배달하는 서비스로 사실상 배달하는 편의점으로 불린다.

이에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1월 상품을 직접 대량으로 구매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B마트'를 론칭했다. 현재 B마트는 서울 경기 권역을 중심으로 30여 곳의 물류센터를 운영 중으로 주문 후 30분~1시간 정도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서비스에 힘을 주는 편의점으로서 'B마트'와 '요마트'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갈수록 몸집을 키우는 형국이다. 작년 편의점들이 배달 서비스 론칭을 저울질할 때 배민과 요기요 입점을 염두에 뒀지만, 배민이 직접 생필품 배달 서비스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각 편의점들은 요기요로 눈을 돌렸다.

B마트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며 편의점 파이를 뺏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배민이 상품을 대량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B마트'

과자·라면 간편요리 즉시 배달 송파·관악·영등포로 사업 확대 요기요 입점 편의점들 "배신감"



라이더가 CU 매장에서 요기요로 접수된 주문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BGF리테일

서비스에 나선 작년 11월부터 개시 후 약 10개월 간 매출 증가율은 9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편의점의 배달 서비스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편의점 업체의 배달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한 편의점의 경우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작년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까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평균 주문액은 48% 줄었고 평균 주문 건수 역시 3.3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

문제는 배민 대신 요기요로 눈을 돌린 편의점들이 '요마트' 론칭으로 요기요와 직접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미 GS25를 비롯해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이 요기요로 입점해 있는 데다, GS

25가 도입한 일반인 배달서비스 '우달'이나 '엠지플레이'과 손잡고 근거리 도보 배달 서비스에 나선 CU 역시 배달 주문은 '요기요'에서만 가능하다.

요기요 내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직접 경쟁하게 되면서 편의점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편의점업계는 배달 주문앱이 편의점의 주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느 지역 편의점에서 어떤 상품의 주문 배송이 많은지 속속 들여다볼 수 있어, 물류창고 거점 과 상품 구색 등을 배달앱이 별다른 진입장벽 없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편의점 관계자는 "주문 플랫폼에 입점해서 유료 광고도 내는 점주도 있는데 배민당찬 느낌이 크다"면서 "편의점의 배달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요마트 물류센터 등도 꾸릴 수 있는 만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편의점 측 주장하는 것과 달리 취급하는 품목이 차이가 있어 경쟁자가 아니다"면서 "매출 데이터도 한정적이라 카드사처럼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새벽배송 전문 업체인마켓컬리도 '컬리 주말 마트관'을 열고 다양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며 '골목상권 파이'를 넘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GS25는 카카오톡과 심부름앱 김집사로, CU는 네이버를 비롯해 최근 위메프에도 입점해 주문 채널 다각화에 나서고 있지만 거대 배달앱에 맞대응할만한 경쟁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남주현 기자 jooh@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등 전국 15개 점포 식품관에서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HMR) '원 테이블(1 TABLE)'의 신제품 '정성담 갈비탕'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갈비탕으로 유명한 맛집 '정성담'과 협업해 선보이는 '원테이블 정성담 갈비탕'은 소갈비에 붙은 지방을 일일이 제거해 염산한 100% 소갈비만을 사용해 6~7대의 갈비대를 푸짐하게 넣었다. 가격은 900g(육수 650g+갈비 250g), 1만3000원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CJ올리브영, 올해 뷰티·헬스 키워드는

- M**ask Beauty:마스크가 바꾼 뷰티
- O**mnii:옴니채널
- V**alue Consumption:가치소비
- I**nnner Beauty:건강에 대한 중요성
- N**o-harm:유해한 환경에서 보호
- G**ap-less:세대·성별 격차 사라짐



지난해와 비교해 15배 증가했다. CJ올리브영 측은 화장품을 한꺼번에 정여두려는 움직임에 더해 언택트 시대를 만나면서 오늘드림 서비스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드러내는 경향이 나타나며 화장품에서도 친환경과 동물 보호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올해는 특히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며 1~10월 건강식품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홍삼, 비타민, 유산균이 주류를 이루던 것과 달리 루테인이나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 특정 기능 개선을 강조한 상품이 강화됐다. 이런 식품을 찾는 고객층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바이러스-프루프' 상품도 주목받고 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 소독제, 구강용품, 살균 용품, 위생용품 등 세정상품 구매 고객이 증가했다. 구강청결제의 경우 지난해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바디스크럽, 셀프 네일 뷰티케어 제품 매출도 증가했다.

CJ올리브영은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소비성향에 힘입어 20·30세대들이 전통적인 세대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과거 젊은 고객들은 '안티에이징' 제품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예방'과 '미래 투자'의 개념으로 탄력 케어나 안티에이징 화장품에 주목한다는 것. 이밖에 중장년층 위주의 탈모 시장에서도 20대 여성이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세훈 올리브영 MD 사업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 트렌드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과거에는 40대 이상 고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2030세대까지 확장된 만큼 대중적인 헬스케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이커머스 "온라인 블프'에서 쇼핑하세요"

소비 불씨 꺼질라... 11번가·롯데온·몰테일 등 마케팅 한창

24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연말 소비 회복세를 기대했던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이커머스 업계는 언택트 소비에 맞춰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이커머스는 연말 대목으로 자리잡은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 마케팅에 한창이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직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3차 코로나 확산과 무관하게 블프 소비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5월 오픈 후 첫 번째 블프를 맞이한 롯데온은 27일까지 닷새간 '롯데온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해 시즌 인기 상품을 포함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

다. 이번에 진행하는 '롯데온 블랙프라이데이'는 롯데온의 11월 마지막 할인 행사다.

'11월 퍼스트데이', '어게인 롯데온세상' 등을 실시하며 11월에 화력을 집중해 온 롯데온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은 11월과 12월에 매출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코세페와 15일 창립기념 행사 등이 자리한 점도 마케팅이 활발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롯데온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3000명에게 행사 기간 사용이 가능한 50% 할인 쿠폰(1만 원 구매 시 최대 5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가전 대표 상품으로는 LG전자 게이밍 모니터를 비롯해 TV, 노트북 등을 판매가 대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삼성전자, 애플, 필립스 등의 인기 가전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명품에서는

롯데온이 병행수입한 상품을 프라다, 생로랑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대비 30%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준비했다.

'해외직구 1위 플랫폼' 몰테일은 무료배송을 내세웠다. 코리아센터의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몰테일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배절(무료배송패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무배절 이벤트는 △특별하고 트렌디한패션 브랜드 마주 △명품 브랜드 쇼핑몰 루이자비아로마 △트렌디한 캐주얼 의류 브랜드 아메리칸글 등 해외 쇼핑물 7개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된다.

11번가는 '할인율'과 '상품수'를 앞세워 블프 시즌에 나선다. 11번가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 직구 인기상품을 정가가 대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해외직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30일까지 실시한다. 할인 상품 수는 총 280만여 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오비맥주, 태양광 에너지로 맥주 만든다

'태양광 발전 공동사업' 업무협약

태양광으로 제조된 맥주가 나온다.

오비맥주는 23일 서울 삼성동 오비맥주 본사에서 캡코에너지솔루션, 이온어스와 '태양광 발전 공동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비맥주는 이번 협약으로 광주와 청주, 이천의 3개 맥주 생산 공장에서 직접 발전한 태양광 에너지로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오비맥주는 광주, 청주,

이천공장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공장에서 발전된 전력을 맥주 생산에 사용, 발전설비 운영사업자에게 전기사용료와 임대료를 지급한다. 캡코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고 이온어스는 운영사업자로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탄소배출권 확보와 운영에 따른 실적평가와 검증 등을 수행한다. 국내에서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사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실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하준(가운데) 오비맥주 대표가 태양광 발전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공장은 내달 오비맥주 광주 공장에 첫 삽을 뜬 후 2021년 초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상반기 내 3개 공장 모두 태양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금융의 모든 순간 ✨



스마트를 위한 디지털 금융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삶에 맞춘 디지털 금융으로
금융의 모든 순간을 편하게, 스마트하게!
NH농협금융이 함께 합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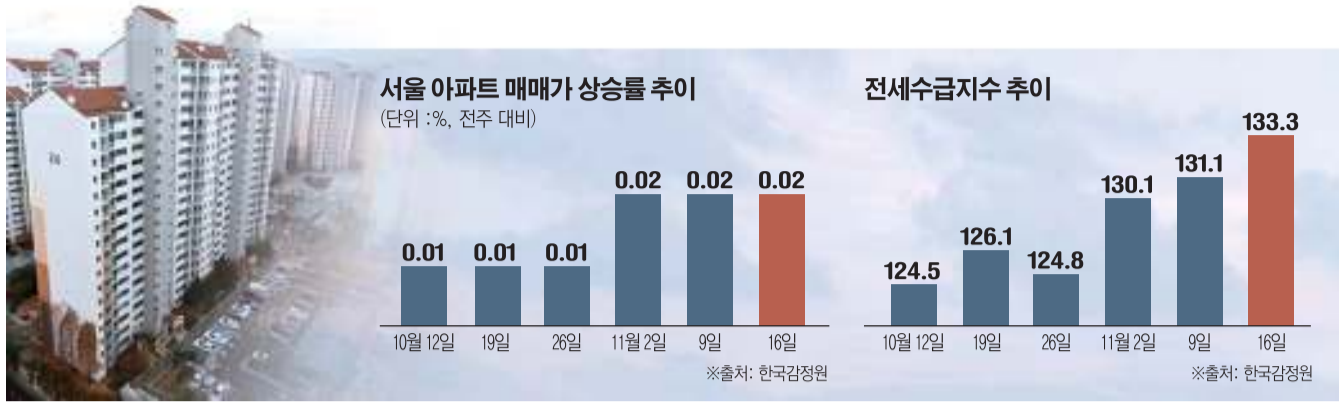
전세난에 '패닉바잉'...집주인, 매물 회수·호가 높여

전세대책 내렸지만 전세난 가중
매물 줄고 전셋값 오히려 더 뛰어
일산·파주·울산 등 매맷값도 상승
'전국이 불장'...집값 들쭉날쭉 가능성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세대책을 19일 내놨지만 매수세로 돌아선 수요층 영향으로 매매가격이 다시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23일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4만 4622개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하기 전날인 18일보다 1317건(2.9%)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경기도는 8만3745건에서 7만9477건으로 닷새 만에 4268건(5.1%) 급감했다. 인천 역시 2만2943건에서 2만1767건으로 1176건(5.2%) 줄어들었다.

이 같은 아파트 매매 감소세는 서울·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되레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전셋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고, 실제 효과가 나가기까지도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본 수요층도 매수세로 다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에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 회수에 나서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14.4%)와 파주시(-7.3%), 인천 부평구(-6.7%), 서울 강서구(-6.5%) 등지의 아파트 매물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라 이번 대책의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곳들로 꼽힌다.

매물이 많지 않은 가운데 매수세가 붙으면서 집값도 오름세다.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파밀리에 2단지' 전용면적 121.45㎡형은 최근 6억80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동일 평형의 직전 거래가 5억3500만 원(10월)에서 1억4500만 원 치솟은 가격이다.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59.98㎡형은 이달 5억9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달 거래가인 4억8500만~4억9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올랐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이 반사이익을 받는 모습"이라며 "치솟는 전셋값에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세입자는 많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가격은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방 곳곳에서도 확인된다. 경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닷새간 1만5289건에서 1만3782건으로 1507건(9.9%) 감소했다. 경북은 1만2042건에서 1만1082건으로 960건(8.0%) 줄어들

었다. 울산도 6707건에서 6403건으로 매물이 4.6% 빠졌다.

부산과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급등세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파트2단지' 전용 114.36㎡형은 최근 14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수의 직전 거래인 6월 10억7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 솟구친 가격이다. 전용 101.48㎡형의 경우 매매 실거래가가 지난달 12억2000만 원에서 이달 13억9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 뛰었다.

전세난을 당장 잠재를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인식이 주택시장에 퍼지면서 전셋값과 함께 매맷값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장고 끝에 '11·19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은 더 불안한 양상"이라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 사례도 적지 않아 집값이 또 다시 한바탕 들쭉날쭉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與 “규제 강화” vs 野 “시장 친화” 민심공략 ‘부동산 입법 전쟁’ 시동

여야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여당과 부동산 노선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연일 부동산시장 친화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집값 급등과 전세난을 잡기 위해 '규제 강화' 쪽으로 계속 접근하자, 이와는 노선

민주, 임대차보호법·감독원 설치법 등 정책 굳히기
국민의힘,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법안 잇따라
“票단 의식한 입법전...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을 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상화특위는 이달 들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의원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기 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임의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직전 연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

는 법안을 내놨다.

또 국민의힘은 16일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고 600%까지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이 역시 정부가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 공급에 나서자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맛 불'을 놓은 셈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다. 앞서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거래분 석원 설치법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바꿔 재발의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난 원인으로 지목된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비판에도 오히려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고히 다지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야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입법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 있는 법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인 대책과 입법만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SK건설, 인공지능 스마트홈 시스템 'SKAI' 개발

SK건설은 인공지능 스마트홈 시스템인 'SK 뷰 AI 홈서비스(SK VIEW AI Home Service · SKAI)'를 다산지엔지와 공동개발,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SK건설 등은 인공지능 학습 기술과 음성 인식·재실(在室) 감지 기술 등을 결합, SKAI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SKAI가 입주자의 선호 온도와 출퇴근 시간이

파악, 방별로 최적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재실·수면 여부를 파악해 불을 켜고 끄고 환기 시스템을 가동할 수도 있다. 음성만으로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SKAI가 갖춘 장점이다.

SK건설은 SKAI를 자사가 짓는 SK뷰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 PART2.** 앞을 닦고 환경용어카드로 보는 환경 이슈
- PART3.** 친환경 모담노드 재대로 해아 제대로 지구를 살린다
-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인사이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속 미학
- PART5.** 건강한 한 끼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잃은 경제가 보인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다들 뉴질랜드로 떠났는데 양친구를 공판다
모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친구형상 해법

"저게 7억 인구 중 저만의 유일한 취미가 있습니다"
박사들 만드는 거 허미민 남자 조용성 이사장의 브라보타임

나조차도 감동 못할 기사, 그 누가 감동해주려?
이진우 작사가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거기 도솔천

고수 열전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단박이나 편성을 운영하는 이가 많지만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름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회장신도담원생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가이아 현신을 짓겠다고 기세를 돋우던 남편이 결국 입을 내고야 말았다. 그후는 실의와 병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뭐야? 편선 사업이 빅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김혜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가격'
강원도 정선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다는
고한8리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열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잠 알 화단을 단정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무른생선 레시피

명사·명작 돌아보기
알고 없는 거리의 화가,
박크시
"15의 원마리 그림이
질려나간 사연"

삼삼오오 50+ 커뮤니티
아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밤
자투리 천도 송송하게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원인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밤 한 밤 바느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바래진
물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밤'
커뮤니티다.

경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조사→공판 중심 수사 구조 바꿔야”

윤석열 “검사의 전장은 법정 재판 준비하는 과정이 수사” ‘공정’ 강조하며 내부 결속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윤 총장이 평소 강조해온 수사시스템 개편 방향 중 하나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필드(전장)는 법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 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며 조사 작성 중심 수사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킬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비전을 ‘공정한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기획검사 및 제도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을 대동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해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또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입 부장·차장검사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연을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지 1주일 만에 재개하는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면 행사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검찰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독이는 등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했다. 법무부는 유선에 이어 인편으로 ‘19일 오후 2시’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 했으나 대검이 접수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대면조사를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조사 일정을 조만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회동 △특활비임의 사용 등으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독도의 겨울

외교부는 외교부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코너에서 ‘독도의 사계 이미지’ 사진 112장을 누구나 다운로드해 받아볼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계절별로 각각 28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외교부 제공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변호인 “수동적 지원”

‘삼성 준법감시위’ 검증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지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강하게 질책받으면서 급하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또 피고인들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강요로 승마 지원을 시작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에 따라 다른 선수들의 지원도 함께 추진했

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다른 기업과 달리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청탁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삼성은 청와대에 그룹 현안이나 애로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소위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현안이라 가벌성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요 현안은 모두 삼성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합병 무효 사건의 1심 판결도 합병의 경영상 합목적성이 인정된다고 했고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 효과가 기업의 이익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특검 측이 낸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7일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김종용 기자 deep@

저공해 미조치 5등급 車 내달부터 서울 운행 제한

앞으로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

한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별도로 단속된다.

홍인석 기자 mystic@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나남**
www.nanam.net nanam



‘무광 도색’은 어떻게 고성능차의 상징이 되었나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색으로 알아보는 차의 비밀

국제유가가 하늘을 찔렀던 2000년대 중반, 항공사들은 기름값 걱정이 태산 같았다. 어떻게 해서든 항공유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쥐어짜 내느라 밤잠도 줄였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쥐어짜던 항공사들은 이른바 ‘누드 항공기’를 운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전체의 페인트를 벗어내 동체 무게를 줄이겠다는 전략이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2006년 비용 절감 차원에서 화물기의 동체 페인트를 모조리 벗겨낸 화물기를 선보였다.



안성 '제네시스 스튜디오'.

사진제공 현대차

◇항공기 페인트 벗겨내자 연 2억 절감=보잉 747-400을 바탕으로 동체 도색을 모두 벗겨낸 누드 항공기 1호는 은색 철판을 고스란히 드러내 눈이 부셨다. 회사 로고와 식별번호만 남긴 채 페인트를 벗겨내자 항공기 무게가 200kg 감소했다. 당시 캐세이퍼시픽은 “1대당 연간 150만 홍콩 달러(약 1억9000만 원)가 절감된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다. 1960년대 치열한 고성능 싸움을 벌였던 차 제조사들은 다양한 모터스포츠 경기에서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 요즘 유행하는 자동차의 컬러 역시 모터스포츠에서 얻어온 경험이 바탕이다.

1960년대 모터스포츠에 뛰어든 차들은 앞서 언급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처럼 차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페인트를 모조리 벗겨냈다.

그래서 경주용 고성능 차 대부분은 고스란히 철판을 드러낸, 무광 형태였다.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1960년대 메슬카 또는 스포츠카들이 모조리 무광 컬러인 것도 이런 이유다.

◇페인트 벗겨낸 경주용 차=자동차 도색은 여러 페인트를 반복해서 입힌다. 일단 철판 위에 페인트가 잘 묻어나도록 기



1960년대 경주용 머신



무광 G70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티볼리 투-톤 컬러 루프

1960대 모터스포츠 자동차 무게 줄이려 페인트칠 벗겨 ‘무광’ 벨로스터 시작으로 국내 고성능차 아이콘 자리매김 쏘울·코나 등 소형 SUV ‘투-톤 컬러’ 젊은 소비층에 인기

초 칠을 한다. 이를 ‘프라이머’라고 한다. 이후 고객이 주문한 컬러를 덧칠한다. 도색을 마치면 그 위에 반짝반짝 광을 내는 칠감을 최종적으로 덧칠한다. 이게 ‘클리어 코팅’이다. 오래된 자동차의 광택이 사라지는 것은 이 ‘클리어 코팅제’가 벗겨진 것이다. 나이가 외부 마찰로 도장 면에 불규칙한 손상이 생기면 빛의 난반사 탓에 광택이 줄어든다.

고성능 경주용 자동차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 페인트를 벗겨냈다면 요즘 차들은 고성능을 상징하기 위해 오히려 페인트를 덧씌운다.

도색 과정에서 반짝이는 클리어 코트를 입히는 대신, 무광 색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특수 칠을 더한다.

그 옛날 고성능 자동차가 광택이 없는 철판 색상이었다면 요즘 고성능 차들은 그 옛날 고성능 차의 아이콘(무광 컬러)을 추종하며 새로운 무광 도색을 입히고 있는

셈이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이런 무광 색채를 ‘매트 피니쉬(Mat Finished)’라고 부른다.

◇고성능 양산차 중심 무광 컬러 인기=국산차도 점진적으로 이런 무광 색채가 늘어나고 있다. 광택이 없는 파스텔 색조의 컬러는 반짝이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한다.

나이가 반짝거리는 광택이 사라질 우려도 없다.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지닌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 초 현대차 1세대 벨로스터가 ‘건 메탈 그레이’ 색상을 활용하면서 인기가 시작했다. 이후 고성능을 상징하는 여러 차종이 무광 컬러를 하나둘 앞세우기 시작했다.

실제로 제네시스 스포츠세단 G70은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이면서 5가지 컬러 가운데 3가지를 무광으로 선보였다.

이보다 앞서 선보인 제네시스 G80 역시 무광 컬러를 여럿 선보이며 뜨거운 사랑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자동차 색상은 때때로 비용으로 둔갑한다.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산 소형 SUV들은 강렬한 인상을 더하기 위해 이른바 ‘투-톤 컬러 루프’를 선보이고 있다. 차 전체가 한 가지 색상이라면 지붕만 흰색 또는 검정으로 차이를 두는 형태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쏘울, 쌍용차 티볼리 등이 이런 컬러를 앞세워 젊은 층에 인기를 누렸다. junior@

타보니 티볼리 에어

성인 남성이 누워도 넉넉한 실내... 이 차, 차박에 대박

티볼리 에어는 애당초 차 지붕을 수동으로 탈거하는 컨버터블, 이른바 ‘오픈카’ 컨셉트였다.

2015년, 티볼리 출시를 앞둔 쌍용차는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컨셉트에 도전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차 지붕을 부분 탈거하는 오픈카였다.

물론 전통식은 아니다. 운전석과 동반석의 하드톱(또는 글라스) 지붕을 손으로 직접 떼 내는 ‘T톱’ 형태다. 티볼리의 밑그림이 된 컨셉트카 XIV-AIR(에어)가 주인공이다. 안타깝게도 양산은 무산됐다. 결국 ‘에어’라는 멋진 이름은 티볼리 롱보드가 냉큼 가져갔다.

◇판매간섭 우려해 2018년 단종=티볼리 출시를 쌍용차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뒤이어 등장한 롱보드 버전 ‘티볼리 에어’ 역시 나름의 수요를 만들었다. 다만 기본형의 균형미가 너무나 뚜렷해 큰 빛을 보지는 못했다.

윗급과의 판매 간섭도 걱정이었다. 티볼리 에어의 차 길이(4480mm)는 윗급인

엔택트 붐 타고 2년 만에 부활 3열 트렁크 공간 중형 SUV 수준 2열 시트 폴딩 땀 2배 넓어져

코란도(4450mm)보다 30mm 길었다. 충분히 무시해도 좋을 만한 차이였다.

그러나 코란도 고객이 이를 너그럽게 받아주느냐는 문제였다. 끝내 판매간섭을 우려해 자리를 내주고 티볼리 에어는 내수 시장에서 철수했다.

티볼리 에어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얼마 안 가 다시 쏟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 홀로 캠핑에 나서는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티볼리 에어를 갈구하는 목소리도 크게 늘었다. 이 무렵 ‘차박(차에서 숙박)’ 문화마저 확산했다. 티볼리 에어가 부활한 것은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새 모델 시승은 서울 도심과 경기도 일



티볼리 에어 내부.

사진제공 쌍용차

대를 넘나들며 약 50km 구간에서 이어졌다. 기본적인 운전 감각은 밑그림이 된 티볼리와 다를 게 없다.

나이가 한번 출시했던 모델의 부활인 만큼, 첫인상도 익숙하다. 직렬 4기통 1.5 가솔린 터보 엔진(최고출력 163마력) 역시 현행 티볼리와 달라진 게 없다. 어색했던 수출형 ‘윙’ 타입 엠블럼 대신 쌍용차 고유의 쓰리시클 엠블럼을 달고

다시 나온 것 정도가 새롭다.

◇엔택트 시대 ‘차박’ 확산에 부활=관심의 초점은 쌍용차가 힘주어 강조한 ‘실내 공간’에 모아진다.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보니 소형 SUV 가운데 최대 사이즈 실내가 눈앞에 펼쳐진다. 실제로 720리터에 달하는 3열 트렁크 공간은 웬만한 중형 SUV 수준이다. 여기에 2열 시트까지 폴딩해서

접어놓으면 공간은 무려 약 2배(1400리터)까지 커진다.

신발을 벗고 3열 공간에 냉큼 몸을 던져 넣었다. 공간도 꽤 깊숙하다. 차에 올라앉자마자 ‘이 차가 이렇게 컸던가’라며 감탄사를 반복했다. 트렁크부터 운전석까지 제법 기어들어 가야 하는 크기다. 쌍용차는 2열을 폴딩한 상태의 실내 길이가 무려 1879mm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키 170cm에 간신히 턱걸이한 기자의 관점에서 실내가 차고 넘칠 만큼 크다.

이리저리 뒹굴고 앉어져도 부담이 없다. 차 안에 앉거나 돌아누워도 간섭이 없다. 이 정도면 2인용 텐트 따위는 절대 부럽지 않을 듯하다. 레저 문화의 확산이 ‘엔택트 시대’를 맞아 자동차 캠핑 문화 확산으로 이어졌다. 티볼리 에어가 여기에 발맞춰 다시 시장에 뛰어 들었다. 단언컨대 B세그먼트 SUV 가운데 캠핑족을 위한 차를 골라야 한다면 티볼리 에어는 최선의 대안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우리은행 집콕지점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WON뱅킹

집콕지점 TIP

메인 화면에서 바로 되는
타행 계좌 간편 조회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보는
내 계좌 총 잔액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잔액 표시 On-OFF

메신저 복사로
계좌번호 자동입력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이 받는 서비스(오픈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0.27 준법감시인-2439 심익필(유효기간 : 2021.09.15)

추창근 칼럼



주필

합리·공정·신뢰 팽개친 김해신공항 뒤집기

터무니없다. 어떻게 '보완 필요성'이 '근본적 재검토'로, 또 '백지화'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나. 백지화의 결과가 왜 가덕도인지 이런 모순도 따로 없다. 김해가 관문공항의 기본여건은 갖췄고 큰 문제가 없으니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4년 전 ADPi 평가에서는 용량확장성도 김해의 점수가 가장 높고,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는 한마디로 국가대계마저 지난 정권의 일은 무조건 뒤엎어 분열을 획책하는 파국의 정치이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악성(惡性) 포퓰리즘이다.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도 합리성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정략적 표계산만 있을 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 어쩌서 가덕도인지 논리도 설득력도 없다. 부지 재선정,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 등 국책사업의 정상적 추진 절차를 무시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성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시장이 물러나 내년 4월 치러야 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다급한 여당이다. "오거돈 성추행이 죽은 가덕도를 살렸다"는 비아냥이 그래서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은 오랜 기간 얽히락뒤치락하면서 영남지역의 '희망고문'이었고 분열을 키운 화약고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논의에 들어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후보지로 압축됐다. 부산은 가덕도를, 대구·경북과 울산·경남도 밀양을 밀

었다. 갈등이 깊어지자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백지화했다. 그러나 다음 박근혜 정부가 신공항 재추진에 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공항설계·감리의 세계적 전문기관이다. 여기서 나온 결론이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 확장이다. ADPi 평가는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었고, 다음이 밀양, 가덕도는 꼴찌로 부적격이었다. 가덕도의 결정적 흠결은 해양 매립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 비행공적 위험도에서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 결과 2016년 김해신공항으로 매듭지어졌다. 이 결정을 5개 시도 단체장들도 수용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해 확장 계획 폐기와 가덕도신공항을 다시 들고 나왔다. 같은 여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로 가세했다. 논란을 키운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국무총리실이 검증하겠다고 재검토의 명석을 깔았다. 줄곧 김해에 문제가 없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던 국토교통부도 입장을 바꿔 대구·경북을 뺀 부·울·경 단체장들과의 합의로 총리실에 떠넘겼다. 결국 총리실에 검증위원회가 설치돼 작년 1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11개월 만에 그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예상대로 답은 정해져 있었다. 검증위 결론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였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 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해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기술적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의 기본여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에 한계가 있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본 재검토' 결정이다. 정해진 백지화 방향에 꺾어주는 무리수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자의적 잣대와,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 때 인근 산을 깎아내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가 동원됐다. 터무니없다. 어떻게 '보완 필요성'이 '근본적 재검토'로, 또 '백지화'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나. 백지화의 결과가 왜 가덕도인지 이런 모순도 따로 없다. 김해가 관

문공항의 기본여건은 갖췄고 큰 문제가 없으니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4년 전 ADPi 평가에서는 용량확장성도 김해의 점수가 가장 높고,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무엇보다 부산시와의 협의라는 행정절차 미비가 신공항 타당성 평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검증위 논의의 졸속과 사실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니 무슨 신뢰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건가. 신공항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가적 대역사(大役事)다. 김해신공항 투자 비용은 4조7320억 원, 가덕도는 8조5850억 원 규모라는 것이 ADPi의 과거 추산이었다. 가덕도에 활주로를 2개 지을 경우 11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지금 계산을 새로 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어렵게 갈등이 정리됐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이끼주의와 정치 술수가 형클어 놓았다. 다시 혼란과 소모적 국론분열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야당까지 여권이 판 가덕도 및에 갇혀 허우적대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은 정말 한심하다. 모두 미래에 크나큰 해악(害惡)을 쌓고 있다.

정책발언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 알기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다. 생계가 유지되고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과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원치 않는 실직, 출산·육아 등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고용보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용보험 없는 노동시장의 위기 극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보호밖에 있는 취약 부분을 여실히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도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33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8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 가입이 꺼려지는 이유도 조사했는데, 첫째, '고용보험 가입으로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이 새로이 적용된다면 여타 사회보험료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지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타 사회보험에서

의 제도 변화는 별도의 논의과정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각 제도의 근거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시 저소득 특고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둘째, '특고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법안 제출 시 특고의 가장 주된 이직 사유인 소득 감소를 실업급여 지급 사유로 명확히 했다. 특고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주된 이직 사유(67.8%)로 낮은 소득을 꼽았다. 이외에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이 사유인 이직도 1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일반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폐업·도산'(3.3%), '계약만료·공사종료'(20.6%) 등과 비슷한 비율이다. 향후 고용보험법이 통과되면,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

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적절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앞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고 있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근로형태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랑스·영국·이탈리아·체코 등 해외 주요국들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특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 세계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위해서는 방향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하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상시화된 시대에 제도적 보호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시름이 덜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로렌스 스텐 명언 "자신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도덕성을 이끌고, 타인에 대한 경의가 우리의 몸가짐을 다스린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 작가, 성직자. 파격적 수법과 생생한 관능 묘사로 그를 유명하게 만든 기이한 연작(連作) 소설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생애와 의견'은 9권을 마지막으로 미완성으로 끝났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13~1768. ☆ 고사성어 / 일전쌍조(一箭雙雕) 화살 한 대로 두 마리 새를 맞춘다는 뜻. 한 번에 두 가지를 수확하는 일을 비유한다. 원전은 북사(北史). 북주(北周)의 활쏘기 명인 장순성(張孫晟)이 돌궐(突厥)에 갔을 때, 왕 섭도(攝圖)와 사냥을 다녔다.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다른 새가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빼앗으려는 걸 본 섭도가 그에게 화살 두 대를 주며 동시에 떨어뜨리라 했다. 그의 손을 떠난 한 대의 화살이 두 마리를 정확하게 같이 꿰어버렸다.

10일 후면 수능일이다. 이번 수능은 그간 치러졌던 때와 다르다. 고사장 책상은 가림막이 설치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6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수능 관련 브리핑 후 기자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게 "혹시 수능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미리 구분해 따로 응시하도록 하고 수능일에 대한 방역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절대 확진자가 나올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능 당일 방역 매뉴얼은 정말

빈틈이 없을까. 취재 결과 고사장 내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의 방역 관리감독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수능 당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단위 고사 학교장 재량에 맡겨 세부 방역 지침을 이행하도록 한 게 원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차도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 부총리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구체적 방역 매뉴얼이 있느냐고 묻자 "점심시간과 각각의 시간(쉬는 시간 등)에 지켜야 할 수칙과 감독관이 해야 할 매뉴얼들은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협의해

지침이 내려가 있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유 부총리의 말은 거짓이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 말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수능이 매개가 되어서 안 된다. 그러려면 이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해야 한다. 공무원·소방관 등 여느 시험과 달리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줄 만큼 중요한 시험이니 수능 감독 매뉴얼 정도는 총괄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세부 매뉴얼 수립과 방역 책임을 학교에 떠넘겼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금, 수험생들이 감염병 불안에 떨지 않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고,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 시사상식 / 네이밍 스폰서(Naming Sponsor)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에 명칭에 기업이름이 들어가는 후원을 뜻한다. '명칭 후원금'으로 번역한다. 리모델링 비용 270억 원 중 150억 원을 지원받은 토월극장이 'CJ토월극장'으로 간판을 바꿔 단 뒤부터 빠르게 확산됐다. ☆ 속담 / 자식을 보기에 아비만 한 눈이 없고 제자를 보기에 스승만 한 눈이 없다. 제 자식은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제자는 그 스승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 유머 / 요즘 커를 얻어 명동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릴 때 안내방송이 나왔다. "이번 열차는 사당, 사당행 열차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당행 키크"이라 하자 여자가 "나두 사당행!"이라고 대답하며 서로 껴안았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손현경 사회경제부/son89@

학교마다 다른 '수능 방역 매뉴얼'

항공업 생사가를 법원의 판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인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이르면 25일 열린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납입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이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을 낸 KCGI를 포함해 반도체 건설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의 주장 핵심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3자 연합은 특히 산은이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해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두 대형항공사의 '빅딜'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무산되고 항공산업은 다시 격랑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KCGI 측은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에는 상법 제418조 제1항이 있다. 이 조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주식을 발행해 다른 주주의 지분을 희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데스크칼럼

박성호

부국장 겸 산업부장



하지만 재판부가 이 조항을 절대 불가침의 잣대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는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상법 제418조2항에는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 외의 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당장 대한항공 부채비율이 100%대로 안정됐다고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미래를 담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산은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 근거로 내세운 한진칼의 회사 정관 제8조 2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회사의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재판부가 법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현재 항공업의 위기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비상사국에는 대책도 비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업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수송의 정상화 시점을 점칠 수 없다는 점

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내년 항공업계 전체 매출이 2019년(8380억 달러) 대비 46%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하고 조원태 회장이 이를 수용한 것은 한국 항공업의 공멸을 막기 위한 사실상 최후의 선택이었다.

만약 조 회장의 백기사로 산은이 나섰다면 사외이사 선임 권한과 경영 성과 미흡 시 조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유증하며 조건에 명시한 것은 설명될 수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불거질 혈세 지원과 독과점, 구조조정 등 3가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상 산은과 조 회장이 종지부를 찍었다.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국유화의 길밖에 없다. 이 경우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5000억 원은 겹값에 불과할 정도로 향후 막대한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 회장은 요금 인상과 구조조정이 없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시장 우려를 불식했다.

KCGI 측의 가처분 신청은 대한항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요구(claims)'라기보다 경영권을 쥐겠다는 '욕구(desire)'의 발로로 보여진다. 인간이 만든 법은 실제 근거보다 과잉규제 혹은 과소규제하는 불일치를 보일 때가 많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vicman1203@

시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집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강화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 이날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판국에 민노총이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방역당국의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에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가졌다.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코로나19 사태는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 행태다. 이번에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단체협약 기간 연장 등 사업장 주요시설의 점거 금지 조항 등을 트집잡는다. 또 '전태일 3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결성권, 중대 재해 사업장-경영상 처벌)의 입법을 압박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줄곧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지금 코로나19의 3차 확산은 다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버티는 경제는 외국의 사태가 악화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임판이다. 방역 2단계로의 상황은 소비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진행해온 '8대 소비쿠폰' 사

업도 일시 중단됐다. 경제가 갈수록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기득권 귀족노조인 민노총은 끝없이 더 내놓으라는 요구만 하면서 총파업으로 위협한다.

서울시는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겨우 자제만 요청하고, 집회 차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는다며 파업과 집회 강행을 재확인했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감염 확산 우려가 어느 곳보다 높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면서 내놓은 '정밀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실내체육시설·식당·방문판매업소·학원·PC방·노래연습장 등 사람이 모이는 거의 모든 곳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고강도 조치다. 민노총의 집회 또한 결코 예외될 수 없다.

경기 추락에 기업 경영은 악화일로이고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국민들이 일상적 생활마저도 제약받는 힘든 상황을 불평 없이 견뎌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도 무시하고 감염 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집회는 어떤 공감도 얻을 수 없다. 민노총은 25일에 이어 이달 29~30일과 다음 달 2~3일에도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2차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을 어기거나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김면수의 이슈 만화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스페인 교육의 선구자인 프란시스코 페레(Francisco Ferrer)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 속에는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경우로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또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잇을 만나면 마스크를 통해 공개되는 아동학대는 이제 연중 사건을 넘어 매일 충격과 분노를 안기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일례로 최근 지난 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A 양이 사망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 양을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된 후 3차레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현장에 동행 출동한 경찰관과 전문가 관계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A 양을 보호 조치하지 못했다며 초동 조치 부실을 인정했다.

또 같은 달 울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허벅지와 발목을 발로 밟고, 들어다 내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23일 현재 13만 7000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등을 아동학대와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와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74건,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4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

됐다.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도 2014년 1만27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지난해 3만455건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매년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늘고 있는 셈이다.

11월 19일은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부 국제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 제정했다.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외에도 아동 관련 국제기념일은 세계아동노동 반대 날(6월 12일), 세계 어린이의 날(11월 20일) 등이 있다.

이 모든 국제기념일은 분명 아동을 위한 날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학대와 노동을 강요하는 악마성을 띤 어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1년 365일 아동을 위한 감시자가 돼야 한다. 진정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필요할 때다.

tearand76@

특허, 특허! 서오텔레콤 사건으로 본 분할출원의 중요성

서오텔레콤과 LG의 특허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매우 유명한 사건이다. 서오텔레콤은 자사의 비상발신 서비스에 대하여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LG와 특허분쟁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2019년 2월 특허권리법위확인 심판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비침해'로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서오텔레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휴대전화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미리 입력해 놓은 연락처에 비상상황을 문자로 알리고, 위난자의 위치정보와 함께 현장상황이 중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1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3년에 특허 등록되었다. 그런데 서오텔레콤과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 기술 협의를 했던 엘지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는 2004년 초 이와 유사한 긴급버튼 서비스를 장착한 알라딘 전화를 출시하였다. 이에 서오텔레콤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04년 4월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서오텔레콤의 특허

청구항 1항의 "상기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 모드를 실행"하는 구성을 엘지의 알라딘 서비스가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였다. 대법원은 특허권리법위 해석은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알라딘 서비스의 경우 비상연락처의 별도 호발신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비침해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표적인 특허분쟁 사건으로 다양한 논란거리를 제공하였지만 필자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서오텔레콤이 핵심기술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만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만약 서오텔레콤이 이 특허의 등록료 납부 전에 분할출원을 해놓는 상태였다면 청구항에서 "상기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라는 한정 사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소송에서 이겼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오텔레콤 사건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할출원을 하여 추후 권리 범위 변경을 통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변리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대한민국 1등 LG전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만나보세요

- 2020 국가고객만족도 가전 11개 부문 최다 수상
- 2020 기업 소셜임팩트 가전 4개 부문 1위
- 2020 '올해의 녹색상품' 의 최고 권위 '녹색마스터피스상' 수상
- 3대 디자인 어워드 'IDEA 2020' 10개 수상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별전
2020. 11. 1 ~ 11. 30

- [행사 1]** TV, 냉장고, 세탁기 등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모델 특별전
 - [행사 2]**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별전 행사 모델 구매고객 경품 추첨 이벤트 (2,020명)
 - [행사 3]** LG 오브제컬렉션 3품목 이상 동시 구매 시, 최대 200만원 혜택
- 상기 제품 이미지는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1등 수상 부문 제품 및 워시타워, 스타일러의 대표 모델로 구성됐으며, 행사 모델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별전 행사 모델 구매고객 경품 추첨 이벤트는 LG전자 멤버십 앱을 참조하세요
 - 본 행사는 행사 참여 모델에 한하며, 모델 및 혜택은 매장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판매 매장에 문의해주세요